주민 열람용

동해안권발전종합계획 변경(안)
(2021~2030)

2021. 2.

Contents

목 차

제 1 장 | 계획의 개요

제1절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3

1. 계획의 배경 ····· 3
2. 계획의 목적 ····· 4

제2절 계획의 의의 및 수립 경위 ····· 5

1. 계획의 의의 ····· 5
2. 수립 경위 ····· 6

제3절 계획의 범위 및 수행방법 ····· 7

1. 계획의 범위 ····· 7
2. 수행방법 및 절차 ····· 8

제 2 장 | 동해안권 여건 및 계획과제

제1절 동해안권 여건 ····· 11

1. 잠재력과 한계 ····· 11
2. 위상 변화 ····· 12

제5절 종합분석 및 발전방향 ····· 13

1. 종합분석 및 계획과제 ····· 13
2. 발전방향 ····· 15

제 3 장 | 동해안권 발전 기본구상

제1절 기본 방향 ····· 19

1. 해안권정책의 정체성 ····· 19
2. 정부 정책방향과의 정합성 ····· 20
3. 동해안권 위상 및 기능 강화 ····· 22

제2절 비전 및 전략 ····· 23

1. 비전 및 목표 ····· 23
2. 추진전략 ····· 24
3. 계획지표 설정 ····· 25
4. 2030년 동해안권 모습 ····· 26

제3절 동해안권 특화방향 ····· 27

1. 공간구상 ····· 27
2. 지역별 특화방향 ····· 28

제 4 장 | 추진전략별 발전방향

제1절 에너지산업의 성장동력화 ····· 33

1. 발전구상 ····· 33
2. 협력프로젝트별 개발사업 ····· 38

제3절 글로벌 신관광허브 구축 ····· 39

1. 발전구상 ····· 39
2. 협력프로젝트별 개발사업 ····· 44

제4절 지역 산업 고도화 및 미래 성장산업 육성 ····· 46

1. 발전구상 ····· 46
2. 협력프로젝트별 개발사업 ····· 51

제5절 환동해권 소통 연계 인프라 확충 ····· 52

1. 발전구상 ····· 52
2. 협력프로젝트별 개발사업 ····· 57

제 5 장 | 집행관리계획

제1절 투자 및 재원조달계획 ····· 61

1. 투자계획 및 경제적 파급효과 ····· 61
2. 재원조달방안 ····· 66

제2절 계획의 집행 및 관리 ····· 69

1. 계획 추진체계 ····· 69
2. 성공적 사업 추진 ····· 73
3. 지속가능한 지역개발 ····· 77
4. 법·제도적 기반 구축 ····· 79

제1장

계획의 개요

제1절 계획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계획의 의의 및 수립 경위
제3절 계획의 범위 및 수행방법

제1장 계획의 개요

제1절 계획의 배경 및 목적

1. 계획의 배경

▮ 동해안권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경과

○ 동해안권 3개 시·도는 2010년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 2016년 변경계획 수립
- 동해안권 계획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해안내륙발전법)에 근거하여 수립

○ 2016년 변경계획은 '환동해권 블루 파워 창조 벨트'를 비전으로 동해안권 창조경제 거점조성, 환동해 해양대륙 소통 교두보 구축을 목표로 4개 추진전략 마련

○ 에너지·해양자원, 산업, 관광, 인프라 부문 총 113개 개발사업 중 2020년 현재 기준 51개(45.1%) 사업을 완료

○ 3개 시·도 발전을 위한 대표 사업을 완료하고, 시·도 간 연대의식 및 협력 방향을 설정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으나, 해안권 위상 저하에 따른 사업 추진 동력 약화, 변화된 사회환경에 적시 대응 부족이라는 한계점을 보유

▮ 정책·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른 계획 변경

○ 2016년 변경계획 고시 후 해안내륙발전법 유효기간이 2020년말에서 2030년말로 연장됨에 따라 계획의 연속성 확보 필요

○ 2017년 5월 문재인정부 출범, 2018년 7월 민선7기 출범에 따라 정부 및 지자체 공약 및 정책방향을 반영할 필요

○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지방소멸 위기가 확산되고, 동해안권 주력산업인 자동차 산업, 철강산업 등의 위기에 따른 지역 경제의 어려움 가속되고 있어, 이러한 사회경제적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발전전략 수립 필요

▮ 2030년을 조망한 동해안권 발전전략 마련

○ 2030년 국내외 사회·경제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동해안권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발전전략 수립 필요

- 기후위기 대응,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 저출산·고령화, 뉴노멀(New-Normal) 등 메가트렌드와 함께 포스트코로나(Post-Corona) 시대 변화 전망
- 특히 포스트코로나 시대 관광 분야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응전략과 과제 발굴 필요

○ 동해안 기능과 역할 변화에 크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는 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 등 환동해 주요 국가들의 정세변화에 주목할 필요

- '한반도 신경제구상'에서는 동해안권을 환동해 에너지·자원벨트로, 기존 국가계획은 남북 및 환동해지역과 연계한 에너지, 관광, 교통물류 협력방안을 제시
- 향후 환동해지역 정세변화는 동해안의 기능과 역할 변화를 가져올 전망

2. 계획의 목적

▮ 국내외 변화된 여건을 반영한 동해안권 발전전략 및 개발사업 재설정

○ 2016년 변경계획 수립 후 변화된 정책환경, 사회·경제적 여건을 반영하여 동해안권 비전과 발전전략 재설정

○ 변경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별 발전방향, 개발사업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발전전략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 및 변경

▮ 동해안권 지역 및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상생발전을 도모

○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동해안권 역할과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강점을 고려하여 국가발전을 위한 국토 발전축으로 육성

○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제시한 적정한 삶의 질(서비스 공간)과 경제적 기회(제조 공간)를 누리는 다중심 국토공간으로 동해안권 경쟁력 강화

○ 동해안권 3개 시·도가 연계·협력할 수 있는 프로젝트 발굴과 상생발전방안을 모색

제2절 계획의 의의 및 수립 경위

1. 계획의 성격 및 의의

1) 계획의 성격

▌해안내륙발전법에 의한 법정계획

○ 해안내륙발전법에 근거한 지역계획이며, 동해안권을 대상으로 하는 법정계획

○ 다른 법에 따라 수립하는 지역계획 중 유일하게 광역자치단체 간 연계를 통해 자율적으로 수립하는 계획

○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입안,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 후 고시

▌지역연계형 중장기 종합계획

○ 2030년을 조망하며 동해안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계획

○ 향후 개발사업 진행을 위한 개발계획의 준거가 되는 지침계획

▌지자체 중심의 상향식 계획

○ 동해안권 3개 시·도가 공동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상생발전방안을 모색

○ 지역특화, 연계협력을 위한 개발방안과 주요사업 제시

2) 계획의 의의

▌국가경쟁력 및 균형발전 강화를 위한 국토개발축 형성

○ 동해안권은 환동해시대를 대비한 환동해경제권의 중심 지역으로서 역할 강화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성장축으로 지역 특성과 잠재력을 극대화

▌광역 간 연계·협력으로 상생발전 도모

○ 산업 및 관광을 중심으로 동해안권 발전을 위한 연계·협력을 강화

○ 국가발전을 위한 성장축으로 동해안권 3개 시·도의 상생발전을 도모

2. 수립 경위

▌동해안권 공동발전을 위한 협력체제 구축(울산광역시, 강원도, 경상북도)

○ 동해안권 시·도지사협의회(2004~)

○ 동해안 광역권 발전계획 수립(2005)

○ 동해안발전포럼(울산발전연구원, 강원발전연구원, 대구경북연구원)(2007~)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 수립 및 고시(2010.12)

○ 동해안권 3개 시·도가 공동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국토연구원·지방연구원 등이 계획수립을 위한 합동연구 추진(2008.12)

○ 지역별 주민공청회(2009.9) 등을 거쳐 주민의견을 수렴, 울산·강원·경북이 공동으로 종합계획을 입안(2010.5)

○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관계부처 협의와 의견 수렴(2010. 5~11),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종합계획을 결정·고시

▌종합계획의 합리적인 변경·조정 권고(2014.7)

○ 2011년 이후 여건 변화 및 세부사업의 변경에 따라 본 종합계획을 일부 수정(2014.7)하여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본 종합계획을 변경

○ 국토교통부, 「해안권 발전종합계획 효율화 방안 연구」를 통해 국내외 여건 변화를 고려한 종합계획의 합리적인 변경·조정 권고(2014.7)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계획 수립 및 고시(2016.9)

○ 울산발전연구원·강원발전연구원·대구경북연구원이 종합계획 변경을 위한 합동연구 수행(2015. 3~12)

○ 지역별 주민공청회(2015.11) 등을 거쳐 주민의견을 수렴, 울산·강원·경북이 공동으로 종합계획을 입안(2015.11)

○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관계부처 협의와 의견수렴(2015.11~12), 국토계획평가(2015.10~12),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종합계획을 결정·고시

제3절 계획의 범위 및 수행방법

1. 계획의 범위

▌공간적 범위

○ 해안내륙발전법에 의거, 동해안에 연접한 3개 시·도(울산광역시, 강원도, 경상북도)의 15개 시·군·구를 공간적 범위로 설정

- 울산광역시 4개 구·군 :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 강원도 6개 시·군 :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 경상북도 5개 시·군 :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2020년

○ 목표연도 : 2030년

▌내용적 범위

○ 동해안권 개발여건 분석

○ 국내·외 사례 조사·분석

○ 동해안권의 기능 및 역할 정립

○ 동해안권 발전 기본구상

○ 부문별 발전전략 및 해양신산업 등 발굴·조정

○ 집행관리계획



2. 과업 수행방법 및 경과

1) 과업 수행방법

▌선행연구 검토

○ 2016년 변경계획 및 각 시·도 및 연구기관에서 수행한 동해안권 연구 검토

▌현장조사

○ 현황자료 조사 및 현장방문을 통해 동해안 지역의 잠재력 및 문제점 검토

▌동해안권 관련 법규, 상위 및 관련 계획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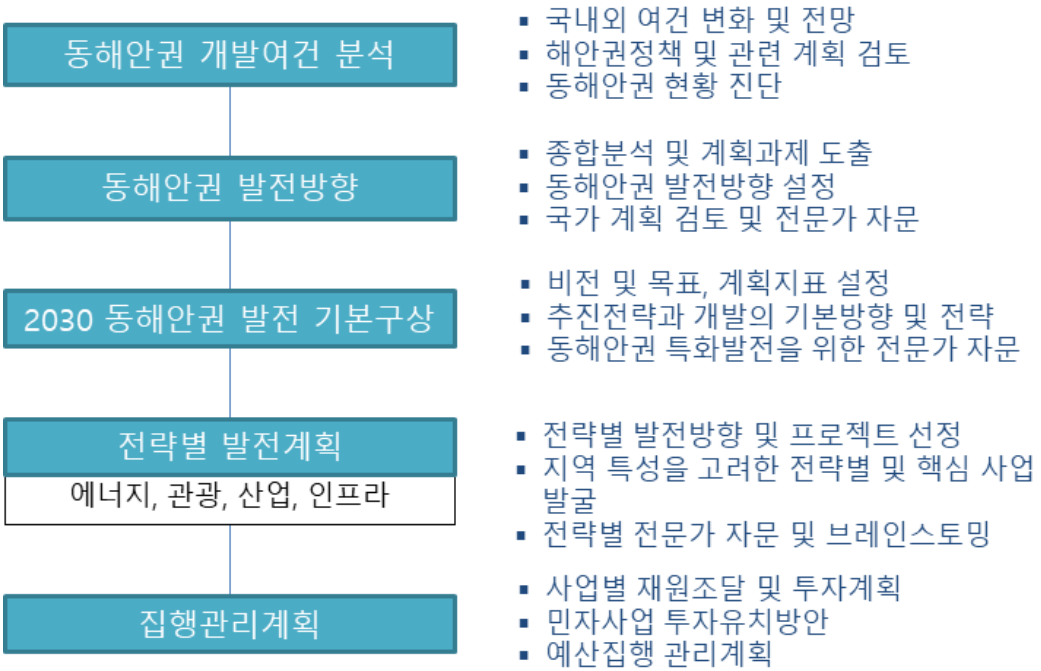
○ 해안내륙발전법, 균특법 등 관련법규 검토

○ 제5차 국토종합계획, 국가균형발전계획 등 중앙정부에서 수립한 상위계획 검토

○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종합(기본)계획 등 기 수립된 계획 중 동해안권 관련 내용 검토

▌전문가 자문

○ 총괄 및 부문별 자문단을 구성, 방향 및 세부내용에 대한 자문



〈그림 1-1〉 과업 수행절차 및 방법

제2장

동해안권 여건 및 계획과제

제1절 동해안권 여건

제2절 종합분석 및 발전방향

제2장 동해안권 여건 분석

제1절 동해안권 여건

1. 잠재력과 한계

1) 잠재력

▮ 성장 잠재력이 큰 환동해권과 협력이 용이한 지리적 입지

○ 환동해권은 인구 1억5천만 명, GRDP 1조 달러 규모의 거대시장

○ 육로, 해로, 항로를 통해 북한, 유라시아 대륙, 북극해로 연결 가능

▮ 국가 기간산업의 중추지역

○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철강 등 국가기간산업 입지

○ 수출과 생산을 주도한 우리나라 산업화의 선도지역

▮ 한반도 에너지 공급 거점

○ 우리나라 에너지 생산량의 45.2%, 공급량의 24.7% 담당

○ 원자력발전소 12기(국내 24), 석유 및 LNG 비축기지 입지

▮ 수려한 자연환경과 풍부한 역사문화자원, 해양자원 보유

○ 산, 바다 등 천혜의 자연환경이 풍부하고, 유구한 역사문화자원 보유

○ 수산물, 가스하이드레이트, 해양심층수 등 해양자원 보유

2) 한계점

○ 동해안권 인구 증가 정체, 외부 유출 증가 → 지방소멸 위험지역 9개 시·군

○ 서해안권, 남해안권에 낮은 GRDP 규모, 연평균 성장률 → 제조업 중심 성장 한계, 새로운 성장 모멘텀 모색 필요

○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균형으로 생산과 휴양지대 공존 → 동해안을 따라 남북 연결구조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구조적 한계

○ 천혜의 자연환경, 역사문화자원 보유로 관광에 유리한 조건이나 연계성 부족

2. 위상 변화

▌해양과 대륙으로 열린 공간

○ 해양이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부상

○ 해양경제와 대륙경제를 연결하는 가교

▌환동해권의 지리적 요충지

○ 환동해 지역과의 교류가 용이한 지리적 입지

○ 신북방정책, 9-Bridge 전략 추진의 핵심 지역(수산, 북극항로, 가스, 항만 등)

▌환동해 에너지·관광·자원 협력의 중심축

○ (한반도 신경제구상) 환동해 에너지·자원벨트로 설정

○ (기존 국가계획) 남북 및 환동해지역과 연계한 에너지, 관광, 교통물류 협력 방안 제시



▲ 해양경제와 대륙경제를 연결하는 동해안권 위상

제2절 종합분석 및 발전방향

1. 종합분석 및 계획과제

▮ 강점(S)

○ 환동해권 경제권의 지리적 요충지
- 육로, 해로, 항로를 통해 중국, 러시아, 일본, 북한 등과 교류가 용이한 지리적 위치

○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국가 기간산업의 거점
-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핵심 기업이 입지하며, 산업환경 변화에 대한 혁신 추진

○ 국가 에너지·자원 공급의 중심지
- 원자력, LNG, 석유 등을 통해 경제활동에 필요한 에너지·자원 공급 주도

○ 수려한 자연환경과 관광자원 보유
- 수려한 동해안의 자연환경과 역사·문화자원을 통한 관광거점으로 발전

▮ 약점(W)

○ 산업 기반 편중으로 동해안권 불균형 발전
- 동해안권 15개 기초지자체 중 일부 지역에 산업 기반 편중, 거점 도시 부족

○ 연계교통망 부족으로 환동해권 역내 교류 미약
- 연계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환동해 국가들과의 도시 간 교류와 연계 미흡

○ 사회간접자본 낙후로 인한 동해안권 지역 간 연계 미흡
-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낙후로 동해안권 시·도 교류와 연계 미흡

○ 동해안권 외부 접근성 취약으로 지역발전 저해
- 동-서 연계교통망 부족으로 동해안권 일부 지역 접근성이 취약하여 지역발전에 저해

▮ 기회(O)

○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한 축으로 기능
- 한반도 신경제구상에서 동해 연안을 관광·교통·에너지·자원 벨트 조성을 구상

○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추진
- 현정부 지역정책 핵심키워드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으로 관련 정책 추진 중

○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공동체에 관심 부상
- 신기술이나 신산업을 지역공동체 친화적인 방식으로 착근 유도

○ 해양의 가치 및 관심 증대로 해양 과학기술 및 산업 부상
- 저탄소경제체제 모색, 식량 및 물 부족, 과학기술 진보 등은 해양산업 발전의 동인

▮ 위협(T)

○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지역산업 위축
- 뉴노멀시대, 감염병 확대 등은 경제발전을 둔화시키고 지역산업의 성장을 저해

○ 코로나19에 따른 관광 등 지역 서비스산업 애로
- 비대면,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대응에 따라 관광산업 등 서비스산업 위축

○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재해 빈도 및 강도 증가
- 기온 및 해수면 상승으로 집중호우, 태풍 등은 자연재해의 빈도와 강도를 증가

○ 인구 이탈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 심화
-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따라 동해안 시·군의 지방소멸 위험도 심화



▲ SWOT 분석

2. 발전방향

1) SWOT 분석에 따른 계획과제

▮ 강화과제(SO)

○ 환동해 에너지·자원 협력 추진
- 가스 등을 통한 동북아 주요 국가들과의 점진적 교류로 환동해시대를 준비

○ 자연·역사·문화 자원 중심의 국제 관광거점 조성
- 동해안의 우수한 자연·역사·문화를 발굴하여 글로벌 관광자원으로 활용

▮ 보완과제(ST)

○ 기후변화 및 4차 산업혁명 대응 에너지 신산업 육성
- 국가성장동력으로서 에너지, 해양자원의 산업화 확대

○ 지역 주력산업 고도화, 서비스산업 확대
-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 융합산업 발전, 농수산업 구조변화를 통한 고부가가치화
-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해 동해안 제조업 역량을 확충하고 융합 기반을 구축

▮ 극복과제(WO)

○ 동해안권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한 환동해 국제교류 기반 강화
- 남북관계 및 동북아 정세변화에 따른 동해안의 역할에 주목하고, 환동해 지역국가와의 교류 확대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동해안 인프라 투자 확대
- 동해안 외부 및 내부 접근성 개선으로 상생 기반 확보

▮ 방어과제(WT)

○ 청정이미지를 활용한 관광산업 육성
- 3만불시대 삶의질 가치, 워라벨문화 확산에 대응한 관광시스템 구축

○ 청정자연환경 보전 및 휴양산업 육성
- 포스트코로나시대 산림해양 기반 치유힐링관광 선도

제3장

동해안권 발전 기본구상

제1절 기본 방향

제2절 비전 및 전략

제3절 동해안권 특화발전방향

제3장 동해안권 발전 기본구상

제1절 기본 방향

1. 해안권정책의 정체성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경제권 및 국제적 관광지역으로 발전

○ 해안내륙권발전법 제1조(목적)에서 “동·서·남해안권 및 내륙권을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경제권 및 국제적 관광지역으로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제·문화·관광 등 지역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교류와 국제협력 증대를 통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규정

○ 이는 글로벌 경쟁과 동북아 경제권 형성에 대비한 대외개방형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벨트형 권역 설정을 의미

○ 대외개방형 벨트(권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제·문화·관광 등 지역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교류와 국제협력 증대하는 개발사업을 보다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안내륙발전법 제정 및 발전종합계획 수립

▌지역별 발전과 장기적 국토발전축 형성의 복합목적

○ 동북아 초국경적 협력개발 기반 구축, 국가 신성장 동력 육성 및 거점 연계강화, 권역내 공유 자원 및 잠재력을 활용한 지역 공동발전 등 보다 거시적인 권역 발전전략 포함

○ 특히 동북아 경제권 부상에 대응하여 지경학적 이점을 살려 해양지향적 국토개발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외개방형 성장벨트를 구축하는 데 초점

○ 권역내 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교류와 국제협력을 증대하는 개발사업을 보다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

○ 지역에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역발전사업의 실현가능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사업 집행체계 강화 및 지원 확대

2. 정부 정책방향과의 정합성

▌'제5차 국토종합계획' 방향성 고려

○ 현재와 미래 세대 모두를 위한 국토의 백년대계 실현을 지향하며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를 비전으로 설정

○ 계획의 목표

- (균형국토) 국토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성과와 체감도를 높이는 한편, 인구 감소와 저성장 시대에 체계적으로 대비하여 어디서나 살기좋은 균형국토 조성
- (스마트국토) 접근성 기반의 생활 SOC 확충, 국토의 회복력 제고 등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품격 있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안심 생활국토 조성
- (혁신국토) 신산업 육성기반 조성, 지역산업 생태계의 회복력 제고 등 여건 변화에 맞는 산업기반을 구축하고, 문화·관광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활력 제고, 3대 경제벨트를 중심으로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이행하고, 유럽까지 이어지는 교통·물류기반 조성과 국제협력 강화 등 글로벌 위상 강화

○ 추진전략

- 지역 간 연대·협력을 통한 경쟁기반 구축, 지역 특성을 살린 상생형 균형발전 추진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산업 육성기반 조성과 지역산업생태계 회복력 제고
- 수자원, 해양자원, 산지자원, 에너지자원 등 국토자원 특성을 고려한 미래가치 창출 및 활용도 제고
- 한반도 신경제구상 이행과 경제 협력 : 남한과 북한의 협력을 통해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고, 나아가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관문국가로 발전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전략' 고려

○ 비전 :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잡힌 대한민국

○ 목표 : 지역주도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

○ 실행력 제고 방안

- 지자체가 최적화된 계획을 수립하여 중앙부처와 계약을 맺으면 포괄보조형식으로 지원하는 계획계약(포괄지원협약) 도입 추진
- 계획계약(포괄지원협약)은 지역별 공정배분, 포괄보조, 다부처 사업, 패키지 지원

▌'한반도 신경제구상' 반영

○ 국정목표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국정전략으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성 및 경제통일 구현' 제시

○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행) 3대 벨트 구축을 통해 한반도 신성장동력 확보 및 북방경제 연계 추진

- 동해권 에너지·자원벨트 : 금강산, 원산·단천, 청진·나선을 남북이 공동개발 후 우리 동해안과 러시아를 연결
- 서해안 산업·물류·교통벨트 : 수도권, 개성공단, 평양·남포, 신의주를 연결하는 서해안 경협벨트 건설
- DMZ 환경·관광벨트 : 설악산, 금강산, 원산, 백두산을 잇는 관광벨트 구축 및 DMZ를 생태·평화안보 관광지구로 개발

○ (남북한 하나의 시장)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남북한 하나의 시장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여건 조성 시 남북 시장협력을 단계적으로 실행 하여 생활공동체 형성

▌'한국판 뉴딜'의 실천

○ '한국판 뉴딜'이란 코로나19로 인해 최악의 경기침체와 일자리 충격 등에 직면한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마련된 국가발전전략

○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꿔 새로운 100년을 설계

○ 튼튼한 고용 안전망과 사람투자를 기반으로 하여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두 개의 축으로 추진

- 전 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위해 D.N.A.(Data-Network-AI) 생태계 강화, 교육인프라의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 육성, 교통·수자원·도시·물류 등 기반시설의 디지털화 추진
- 도시·공간 등 생활환경을 녹색으로 전환하고 저탄소·분산형 에너지를 확산하며, 혁신적 녹색산업 기반을 마련하여 저탄소 산업생태계 구축

○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등 10대 대표과제 선정·추진

3. 동해안권 위상 및 기능 강화

▌환동해시대를 선도하는 동해안벨트

○ 환동해권은 한반도 동해 연안과 일본 서해 연안지역, 러시아 극동지역, 중국 지린성과 헤이룽장성 등 지역으로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경제권 형성에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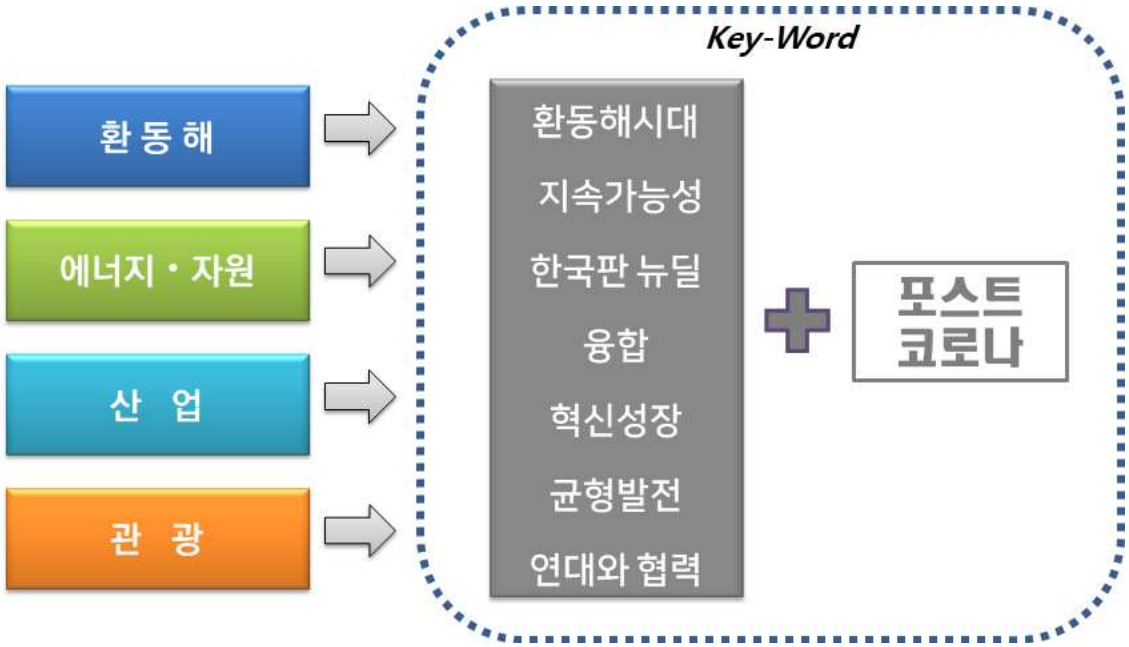
○ 환동해지역은 중국의 서안지역 중시 및 러시아로부터의 에너지 확보,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 및 동북아 에너지 공급 확대, 북극항로 개척 등과 맞물려 부상

○ 한반도 신경제구상에서 제시한 에너지·자원벨트의 기능을 강화하고, 동해안 해양관광자원을 활용하여 환동해지역 교류·협력 강화

▌미래 키워드를 고려한 동해안 발전방향 설정

○ 동해안권 주요 분야인 환동해, 에너지·자원, 산업, 관광 등 분야 미래 전망을 고려할 때 발전 키워드는 환동해시대, 지속가능성, 한국판 뉴딜, 융합, 혁신성장, 균형발전, 연대와 협력 등임

○ 여기에 코로나19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이후 새로운 사회변화상을 고려한 동해안권 발전방향 재정립



▲ 동해안권 발전 키워드

제2절 비전 및 전략

1. 비전 및 목표

▌비전 : 지속가능한 환동해 블루 파워벨트

○ 핵심 주제어 : 환동해시대, 지속가능성, 한국판 뉴딜, 융합, 혁신성장, 균형발전, 연대와 협력, 포스트코로나

○ 대내외적으로 연대와 협력을 통해 환동해시대 개척

○ 기후위기, 포스트코로나시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 거점으로 발돋움

○ 동해안권 시도의 상생과 국가 균형발전 달성

▌2대 목표

○ 함께 잘사는 경제공동체 구현

- 제조업과 관광 중심의 서비스업 기반이 균형을 이뤄 삶의 질과 경제적 기회를 고루 누리는 경제공동체 형성 및 상생발전

○ 연대와 협력의 환동해권 형성

- 환동해시대 국가 발전의 중심축 형성, 환동해국가와의 교류 및 협력 거점으로서 연대와 협력 기반의 환동해 라인 형성



▲ 동해안권 비전 및 전략

2. 추진전략

▌에너지산업의 신성장동력화

○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동해안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에너지전환과 함께 에너지산업 육성을 추진할 필요

○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기술을 통한 에너지 신산업 육성과 정부의 혁신성장 산업인 수소산업 육성을 통해 미래 수소경제시대를 대비

○ 전통적 동해안 에너지산업인 원자력을 안전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에너지산업으로 전환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체계를 구축

▌글로벌 신관광허브 구축

○ 동해안권의 수려하고 청정한 자연자원과 유구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여 환동해권 대표 관광지로 육성

○ 관광트렌드,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관광행태에 따라 동해안 강점을 활용한 힐링, 휴양, 체험, 생태관광으로 차별화

○ 동해안권 관광자원의 통합적 관리 및 연계를 통해 지역 상생발전의 토대 구축

▌산업 고도화 및 신산업 육성

○ 글로벌 환경변화에 따른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 등 동해안권 주요 기간산업의 위기에 대응하여 지속성장을 위한 산업 고도화 노력 필요

○ 조선, 바이오, 해양심층수 등 동해안의 주요 자원인 해양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을 육성하여 미래 해양시대에 대비

○ 4차 산업혁명 시기 스마트화를 통해 농수산업 고도화를 추진하고 신성장산업으로 육성

▌환동해권 소통 연계 인프라 확충

○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국제적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환동해권 발전을 위한 국가 간 공동협력 추진

○ 동해안권 시·도 협력을 위한 거점 간 연결, 동해안권과 타 지역 협력을 위한 연계 교통망을 구축하여 대내외 개방적 인프라 확대

3. 계획지표 설정

1) 기본 방향

○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2016.9)에서 제시한 계획지표를 기준으로 일부 지표 재조정

○ 기존 지표 중 '미래 에너지 발전거점'을 제외하고, 개발사업 내용에 맞게 '에너지산업' 지표를 추가

○ 지역경제 지표는 기존 고용유발 지표에서 전략별로 구분하여 제시

3) 계획지표

○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의 계획 기간인 2030년까지 개발사업의추진에 따른 성과 측정 목표치를 계획의 지표로 제시

○ 2030년까지 개발사업의 추진에 따라 지역경제 측면에서 생산유발 파급효과는 30조8,711억 원, 부가가치유발 파급효과는 13조4,277억 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고용유발 파급효과는 204.8천 명일 것으로 예측

○ 관광개발 사업에 따라 2030년까지 동해안권의 관광객은 24,457천명이 증가할 것으로, 숙박관광객은 전체 관광객의 30%인 7,337천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선형 기반 시설의 경우 531.5㎞의 철도와 77.8㎞의 도로, 373.1㎞의 탐방로가 연장될 것으로 예상

○ 항만 물류 기반시설은 총 34선석의 접안능력과 1선석의 크루즈 접안능력이 확충되고 물동량과 국제여객 이용객은 각각 384.6천톤과 1,221천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

○ 에너지산업의 주요 기반시설은 수소충전소 25개, 수소배관망 500㎞, 풍력발전 용량 600MW에 이를 것이고, 원전해체거점은 중수로와 경수로 총 2개로 예측

〈표 3-2〉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 계획지표

사업유형	계획지표	단위	2030년 목표량
지역경제	생산유발	억원	308,711
	부가가치유발	억원	134,277

사업유형		계획지표		단위	2030년 목표량
		고용유발		천명	204.8
			에너지	천명	69.9
			관 광	천명	46.4
			산 업	천명	19.8
			인프라	천명	68.7
관광개발		관광지 방문객수		천명	24,457
		체류방문객수(숙박관광객수)		천명	7,337
기반 시설	철도	철도 연장		㎞	531.5
	도로	도로 연장		㎞	77.8
	항만 물류	총물동량		천톤(RT)	384.6
		접안시설		선석	34
		국제여객		천명	1,221
		크루즈		선석	1
	마리나	계류시설		척	647
	탐방로	탐방로 연장		㎞	373.1
에너지산업		수소충전소		개수	25
		수소배관망		㎞	500
		풍력발전용량		MW	600
		원전해체거점		거점 수	2

주 : 세부사업의 계획기간이 2030년 이후로 기재된 경우에는 계획기간을 2021~2030년으로 간주

4. 2030년 동해안권 모습

▮ 환동해 교역의 중심

○ 중국, 러시아, 일본 등 환동해 주요 도시와의 교류협력 확대

○ 환동해 경제권의 중심축으로 성장

▮ 국토 발전의 거점

○ 동해안 남부권 중심에서 동해안축으로 성장거점 확대

○ 기후변화, 해양,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한 융복합산업 육성

▮ 다중심 경제공동체

○ 울산에서 고성까지 이동시간 단축으로 동해안권 주민의 연대 강화

○ 적정한 삶의 질(서비스 공간)과 경제적 기회(제조 공간)를 누리는 다중심 국토공간 조성

제3절 동해안권 특화발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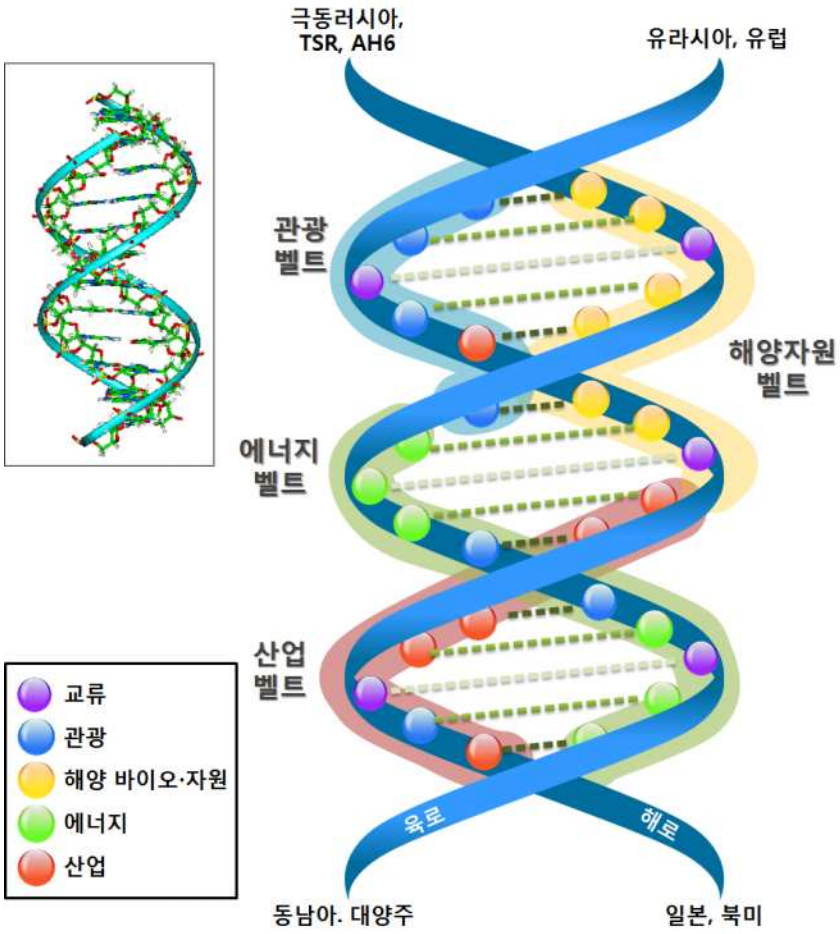
1. 공간구상

▌기본방향

○ 2016년 변경계획의 기본방향을 수용하여 '동해안권 발전 DNA 모형'을 기본방향으로 설정

- 동해안권과 환동해권, 유라시아 대륙이 육로와 해로를 두 축으로 연결되고, 주요 거점지역이 벨트로 연계

○ 동해안권 전체를 아우르며, 동해안 지역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동해안권 발전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



자료 :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2016.9)

▲ 동해안권 발전 DNA 모형

▌공간구조 설정

○ 동해안권의 비전과 목표, 전략 등을 기준으로 설정

- 계획의 기본방향, 비전 및 목표, 전략 및 발전방향과 부합하고 동해안권 3개 시·도를 아우르는 거점지역 선정

○ 지역별 특화기능을 중심으로 공간구조 설정

2. 지역별 특화방향

▌동해안 전체 : 수소경제벨트

○ 기후위기 대응, 수소경제시대 준비를 위해 동해안 전체를 수소경제벨트로 조성

▌동해 북부권 : 국제생태관광 거점

○ DMZ지역, 산림휴양지역, 백두대간 인근 생태관광지 등 우수한 자연생태자원과 관광 기반을 활용한 국제생태관광 중심지 구축

○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양양군, 강릉시

▌동해 남부권 : 융·복합에너지 거점

○ 원자력 및 원전해체산업, 풍력산업(MRO) 등 에너지 신산업 중심 융·복합에너지 거점 조성

○ (울산광역시)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경상북도)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동해 중부권 : 해양 자원·관광 거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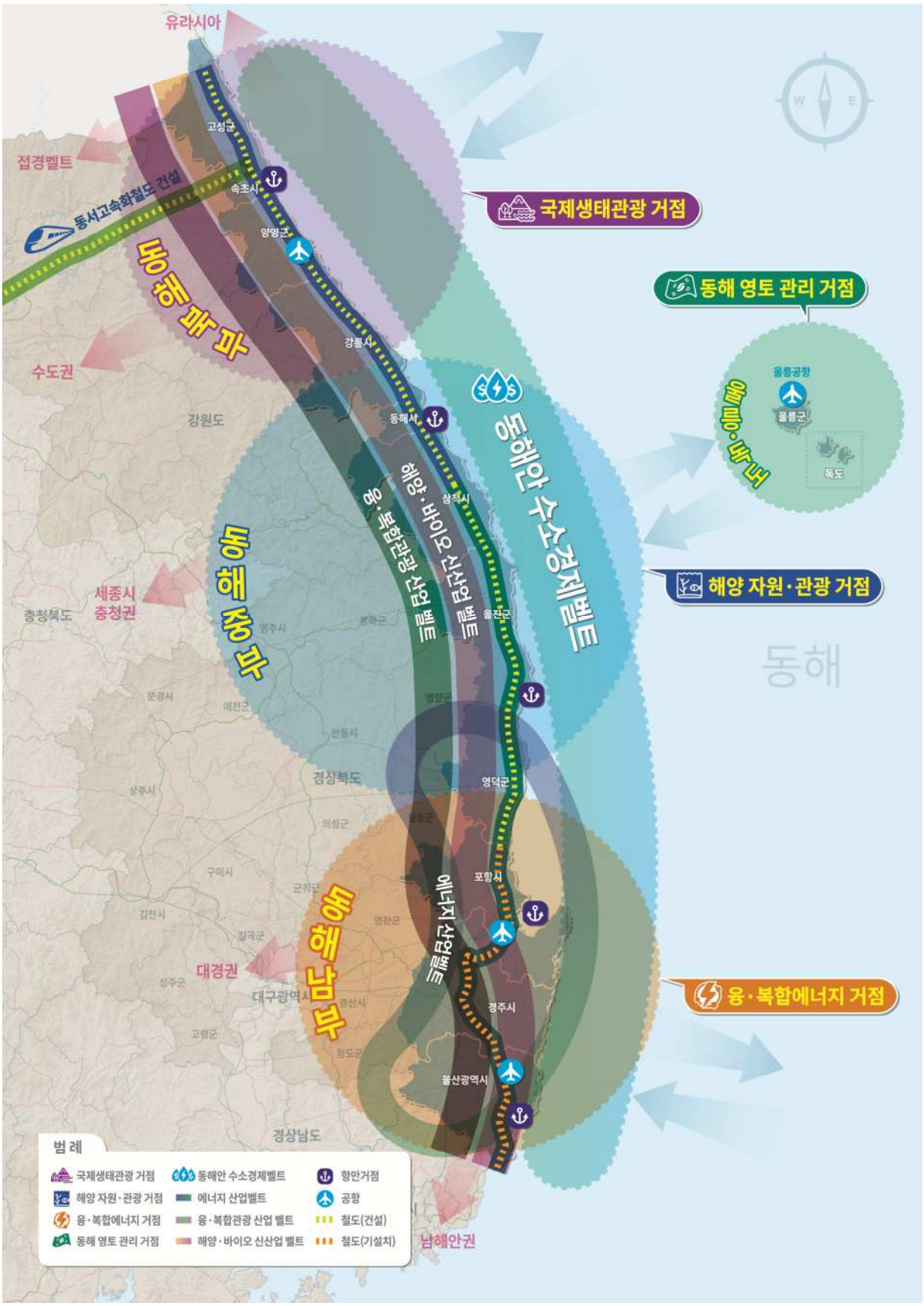
○ 동해안의 풍부한 해양자원과 청정한 자연자원을 활용한 해양 자원·관광 거점 구축

○ (강원도)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경상북도) 영덕군, 울진군

▌울릉권 : 동해 영토 관리 거점

○ 울릉도와 독도는 영해를 확정짓는 전략적 요충지로서 동해의 영토관리 거점으로 조성

○ (경상북도) 울릉도·독도


유라시아
접경벨트
동서고속화철도 건설
동해축
수도권
강원도
세종시
충청권
충청북도
동해중부
대경권
동해남부
경상북도
경상남도
남해안권
고성군
속초시
양양군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울진군
영덕군
포항시
경주시
울산광역시
울릉공항
울릉군
독도
울릉·독도
동해
국제생태관광 거점
동해 영토 관리 거점
해양 자원·관광 거점
융·복합에너지 거점
동해안 수소경제벨트
해양·바이오 신산업 벨트
융·복합관광 산업 벨트
에너지 산업벨트
범 례
국제생태관광 거점
해양 자원·관광 거점
융·복합에너지 거점
동해 영토 관리 거점
동해안 수소경제벨트
에너지 산업벨트
융·복합관광 산업 벨트
해양·바이오 신산업 벨트
항만거점
공항
철도(건설)
철도(기설치)

▲ 종합구상도

제4장

추진전략별 발전방향

제1절 에너지산업의 성장동력화

제2절 글로벌 신관광허브 구축

제3절 산업 고도화 및 신산업 육성

제4절 환동해권 소통 연계 인프라 확충

제4장 추진전략별 발전방향

제1절 에너지산업의 성장동력화

1. 발전구상

1) 발전방향

▮ 미래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

○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미래 수소경제시대를 대비하여 수소인프라 구축

○ 정부 혁신성장전략에 맞추어 수소산업을 육성하여 동해안 혁신성장 동력 확보

▮ 에너지 · 해양자원 벨트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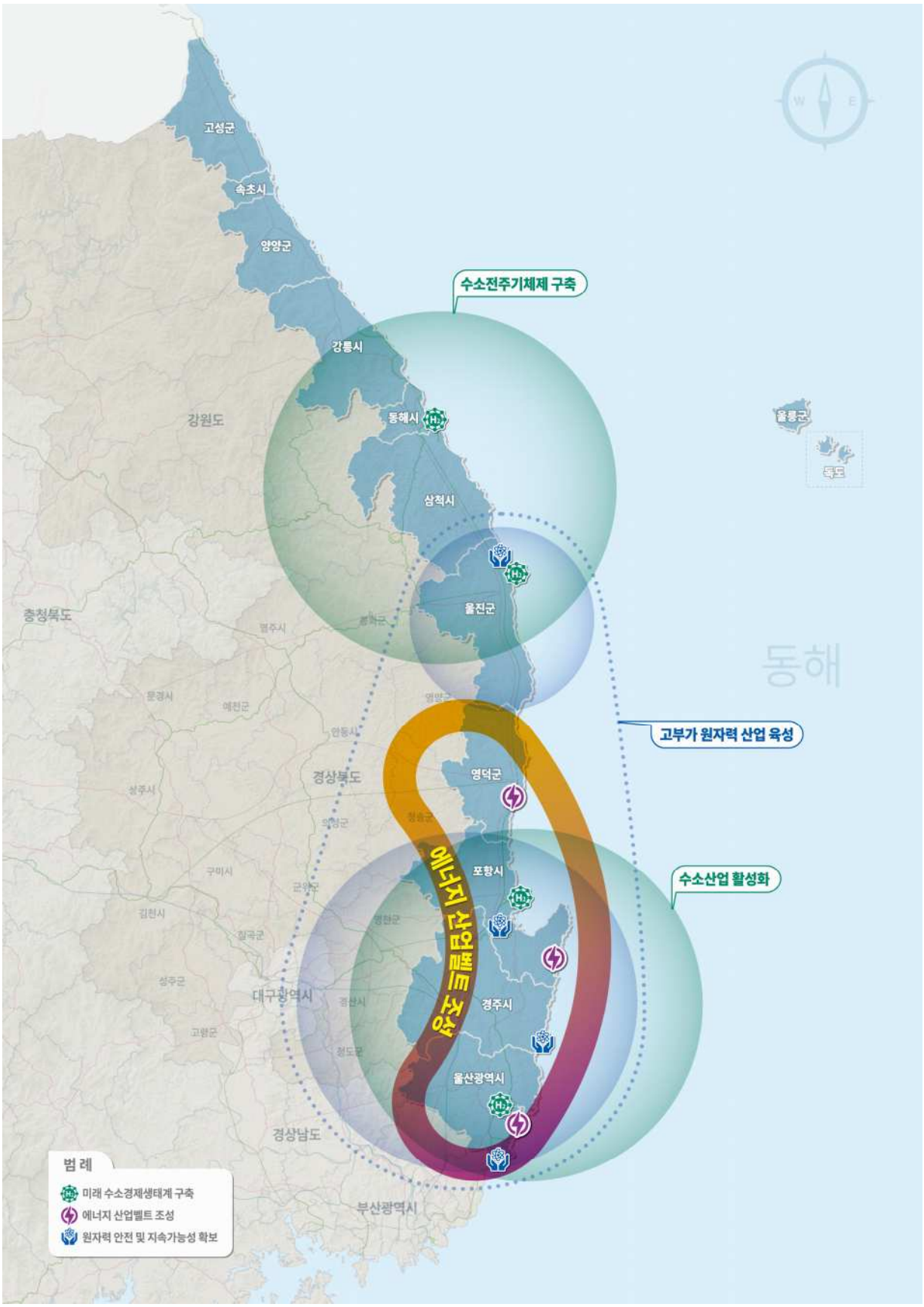
○ 동해안 입지 및 산업 기반으로 에너지산업화를 확대하여 동해한 성장기반 마련

○ 동해안 해양자원의 개발 및 활용을 통해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개발

▮ 원자력 안전 및 지속가능성 확보

○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라 축소되나 일정기간 유지되는 원자력발전의 안전성을 강화하여 원자력에너지의 신뢰성 확보

○ 발전뿐만 아니라 해체기술 확보를 통해 원자력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



▲ 에너지산업의 신성장동력화

2) 협력프로젝트

▮ 미래 수소경제생태계 구축

○ 수소전주기체제 구축 프로젝트

- 수소 생산, 저장·운송, 수소에너지 활용 뉴타운 조성, 연료전지 보급을 통한 활용 등 수소전주기체제 구축

○ 수소산업 활성화 프로젝트

- 수소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울산경제자유구역,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를 통해 국내 수소산업 발전을 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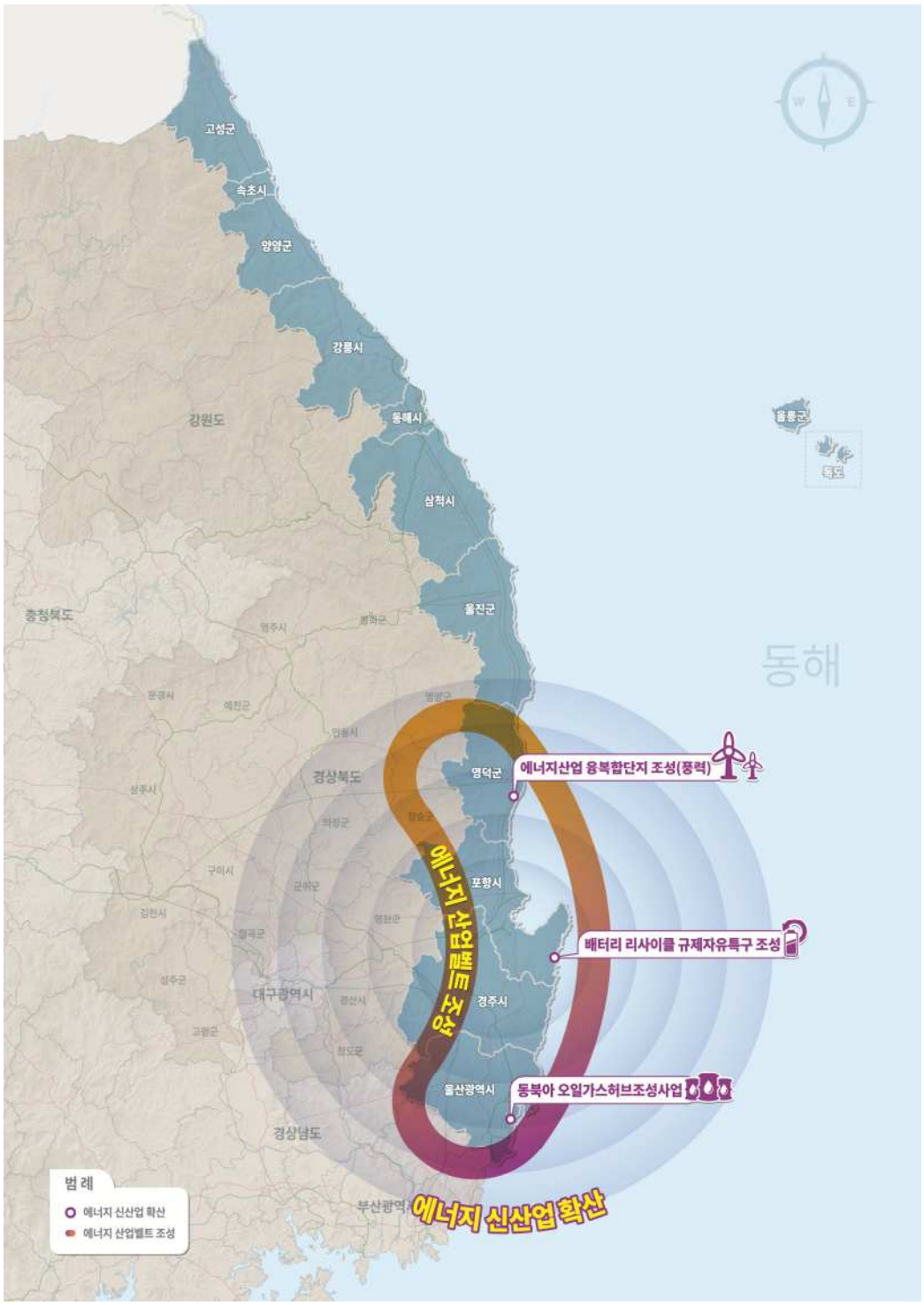


▲ 발전방향(미래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 구상도

▮ 에너지산업벨트 조성

○ 에너지 신산업 확산 프로젝트

- 울산의 석유화학산업, 경북의 풍력 및 배터리산업 기반 확충을 통해 동해안의 주요 에너지 신산업으로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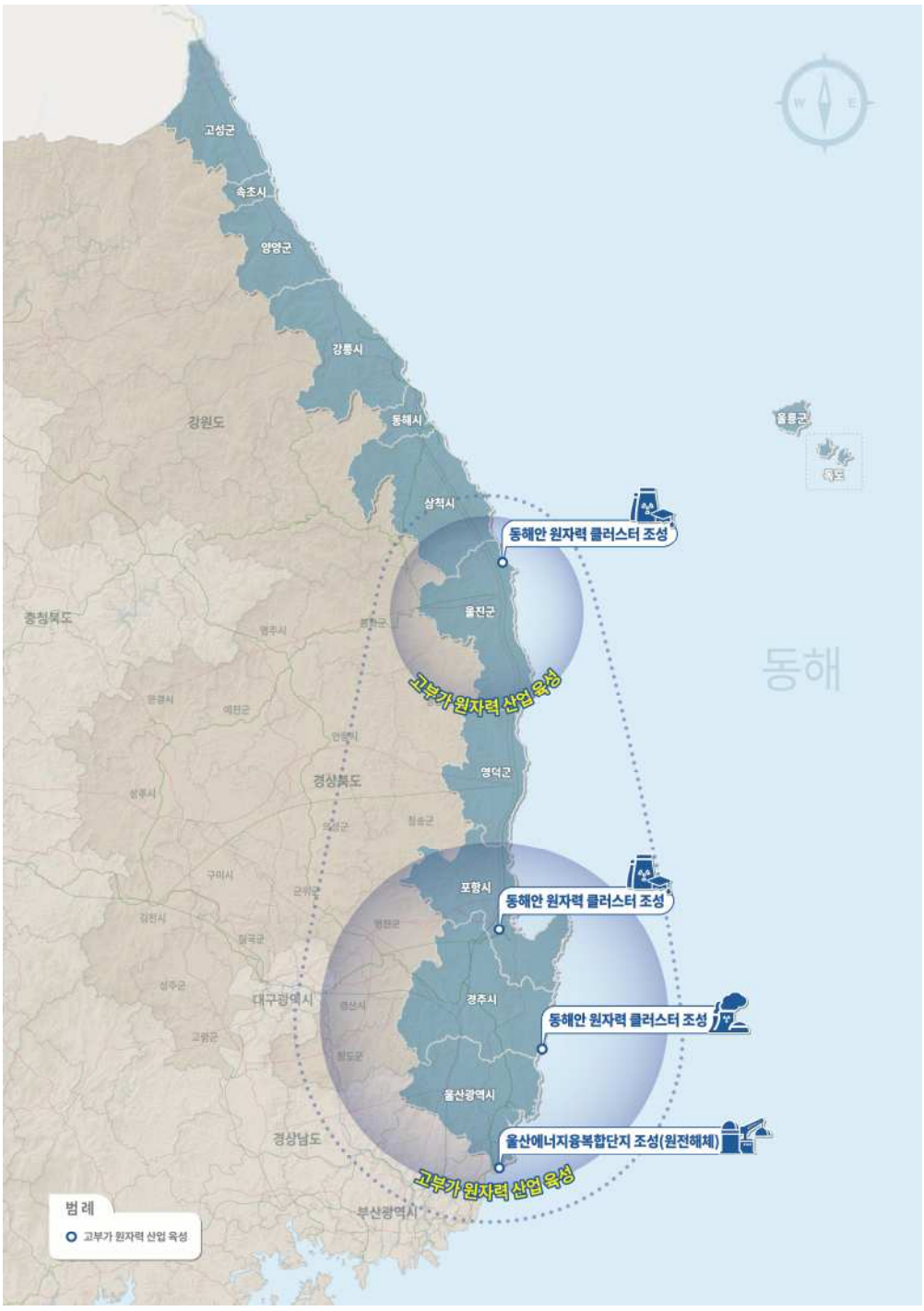


▲ 발전방향(에너지산업벨트 조성) 구상도

▮ 원자력 안전 및 지속가능성 확보

○ 고부가 원자력산업 육성 프로젝트

- R&D 강화, 안전한 방사성폐기물 관리 등을 통해 원자력산업의 질적역량 확대
- 글로벌 원전해체 시장 성장 전망에 따라 원자력해체산업을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산업으로 원자력산업 육성



▲ 발전방향(원자력 안전 및 지속가능성 확보) 구상도

2. 협력프로젝트별 개발사업

▼ 발전방향, 협력프로젝트 및 개발사업

발전방향	협력프로젝트	개발사업
미래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	수소전주기체제 구축	▪ 수소에너지 실증 및 생산단지 조성 ▪ 동해안 액화수소 클러스터 조성 ▪ 수소에너지 융합 실증기반 해안지구 뉴타운 조성
	수소산업 활성화	▪ 수소경제 중심지 울산경제자유구역 개발 ▪ 수소·연료전지발전 클러스터 조성
에너지산업벨트 조성	에너지 신산업 확산	▪ 동북아 오일가스허브 조성 ▪ 배터리 리사이클 규제자유특구 혁신사업 육성 ▪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조성(풍력)
원자력 안전 및 지속가능성 확보	고부가 원자력산업 육성	▪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 울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원전해체)

제2절 글로벌 신관광허브 구축

1. 발전구상

1) 발전방향

▌글로벌 관광 허브구축

○ 권역별 특화 개선을 통한 환동해권 글로벌 네트워크 및 관광거점 구축

○ 동해안권의 풍부한 자원을 활용한 거점 구축 및 연계, 세계적인 관광지로 육성

▌해양 웰니스 관광벨트 구축

○ 환동해 해양헬스케어 및 관광융합벨트 구축으로 해양관광 고부가가치화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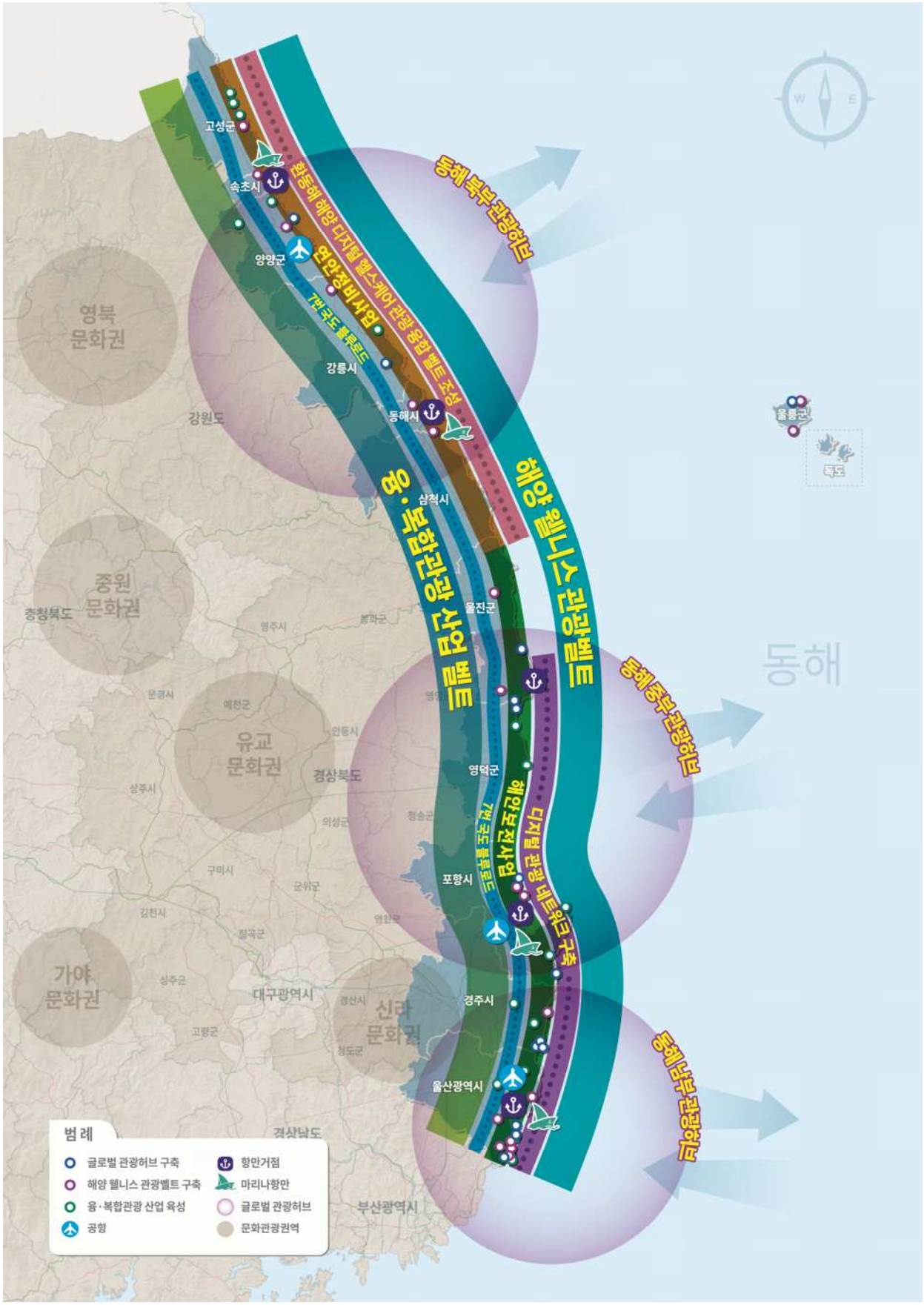
○ 사계절 명품관광화, 해양 웰니스 관광벨트 구축

▌융·복합 관광산업 육성

○ 지역 자원의 통합적 관리·연계를 통한 관광산업 육성으로 지역의 상생적 발전 토대 구축

○ 자원의 고도화 및 융복합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 제고

○ 지역민과 함께하는 생활관광 기반 구축



▲ 글로벌 신관광허브 구축 전략 구상도

2) 협력프로젝트

▌글로벌 관광 허브 구축

○ 7번국도 블루로드 구축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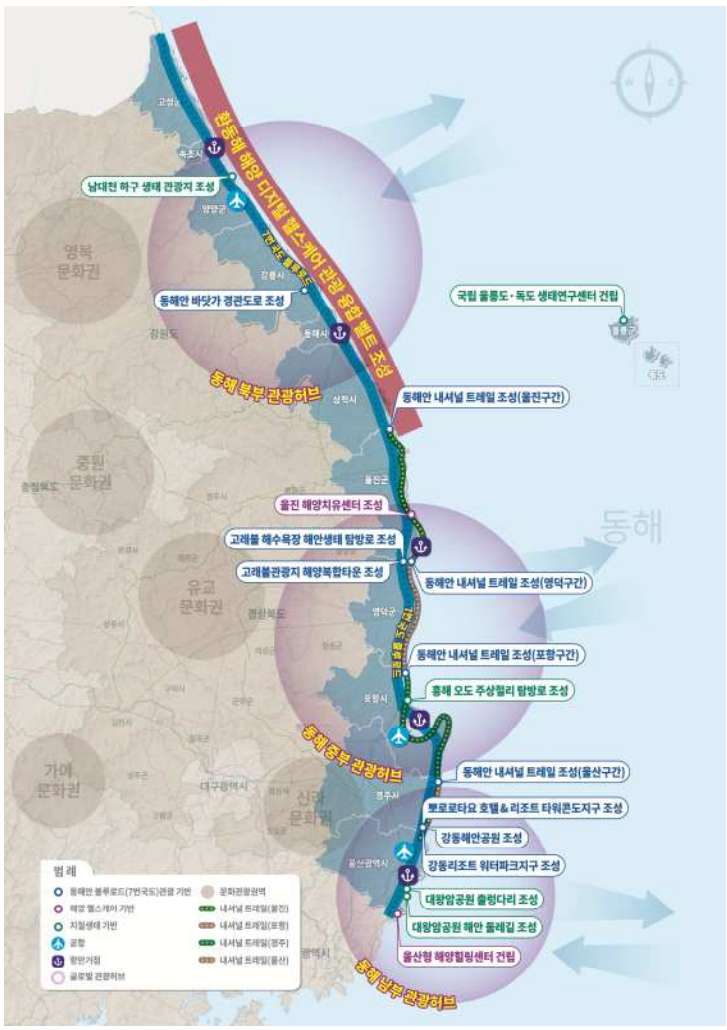
- 강원-경북-울산 동해안을 잇는 7번 국도를 활용하여 국내 대표적인 '동해안 드라이브 여행'이라는 여행 프레임을 구상하며 자원+산업+커뮤니티 공생 관계 확립

○ 해양헬스케어벨트 구축 프로젝트

- 광역 시·도 권역을 넘어서는 초광역협력을 통한 해양헬스케어 산업과 관광산업을 융합한 협력 비즈니스 모델을 통한 시너지 효과 극대화

○ 지질생태 명소화 프로젝트

- 지질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바다 풍광과 기암괴석을 감상할 수 있는 해안 둘레길 조성 및 생태 관광지 연계한 생태관광 기반 마련



▲ 발전방향(글로벌 관광 허브 구축) 구상도

▮ 해양 웰니스 관광벨트 구축

○ 해양테마파크 및 해양레포츠 기반 조성 프로젝트

- 수려한 입지환경과 각종 인프라 시설을 활용한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해양관광의 패러다임 변화 및 비대면 관광트렌드에 적극적으로 대응

○ 로하스 휴양관광벨트 조성 프로젝트

- 숙박, 전시, 체험 등 복합적인 휴양욕구를 충족 시킬 수 있는 다기능 산림휴양 단지 및 청정환경 관광 거점 구축

○ 영토관리 및 어촌어항 관광기반 조성 프로젝트

- 독도 영토주권 관리를 위한 대국민 제공 콘텐츠 개발 및 기후변화로 인해 침식피해를 입은 거주민 삶의 질적 제고 및 관광객을 위한 친수공간 조성



▲ 발전방향(해양 웰니스 관광벨트 구축) 구상도

▮ 융·복합 관광산업 육성

○ 인문학 테마파크 조성 프로젝트

- DMZ, 역사, 문화 등 인문학과 관련된 동해안 컨텐츠를 발굴·연계하여 동해안 문화적 정체성을 확보

○ 생활관광 기반 구축 프로젝트

- 현지 삶에서 느끼는 고유의 문화나 볼거리를 즐기고 지역 내에서 당일치기 여행으로 맞춤 여가관광 기반구축

○ 디지털관광 기반 구축 프로젝트

- 음악분수, 음향, 워터스크린, 빔조명 등 디지털을 활용한 관광 컨텐츠 및 디지털 융합 체험 서비스 공간을 제공하는 테마랜드 조성



▲ 발전방향(융·복합 관광산업 육성) 구상도

2. 협력프로젝트별 개발사업

▼ 발전방향, 협력프로젝트 및 개발사업

발전전략	협력프로젝트	개발사업
글로벌 관광허브 구축	7번국도 블루로드 구축	• 동해안 바닷가 경관도로 조성 • 고래불 해수욕장 해안생태 탐방로 조성 • 고래불관광지 해양복합타운 조성 • 동해안 내셔럴 트레일 조성 • 강동리조트 워터파크지구 조성 • 뽀로로타요 호텔&리조트 타워콘도지구 조성 • 강동해안공원 조성
	해양헬스케어벨트 구축	• 환동해 해양디지털헬스케어 · 관광 융합벨트 조성 • 울진 해양치유센터 조성 • 울산형 해양힐링센터 건립
	지질생태 명소화	• 흥해 오도 주상절리 탐방로 조성 • 국립울릉도·독도생태연구센터 건립 • 대왕암공원 해안둘레길 조성 • 대왕암공원 출렁다리 조성 • 남대천 하구 생태 관광지 조성
해양 웰니스 관광벨트 구축	해양테마파크 및 해양레포츠 기반 조성	• 남목 해안산림 레포츠시설 설치 • 진하 해양레저 특구 • 서생 해양 관광단지 지정 및 운영 • 속초 마리나항 조성 • 문무대왕 선부 해양레저공원 조성 • 환동해 해양레저 실감체험 복합센터 조성
	로하스 휴양관광벨트 조성	• 양양 다기능 산림휴양 거점 구축 • 연곡해변 해수온천 조성 • 무릉 복합체험관광단지 조성 • 오산종합리조트 공공시설 조성 • 울진 온천 특화관광지구 조성 • 간절곶 바다 병원 건립

발전전략	협력프로젝트	개발사업
		• 진하 낭만해수풀장 조성 •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 • 간절곶 마음챙김 센터 건립 • 여남갑 친수공간 조성
	영토관리 및 어촌어항 관광기반 조성	• 묵호항 항만 재개발 • 남북 산불대응 협력센터 조성 • 연안정비사업 • 저동항 다기능어항(복합형) 개발 • 국립독도아카이브센터 건립 • 해안보전사업(경북)
융·복합관광 산업 육성	인문학 테마파크 조성	• DMZ평화「국립자연휴양림」조성 • 기박산성 의병 역사테마파크 조성 • 설악동 집단지구 재정비 • 김일성 별장~거진항 해안데크 산책로 조성 •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 조성
	생활관광 기반 구축	• 경주 동천~황성 도시숲 조성 • 취약계층 이용편의를 위한 무장애숲길 조성 • 소망타워&소망금고 조성 • 간절한 바다 산책로 조성 • 축산(영덕) 블루시티 조성 • 오색 집단시설지구 정비 • 강릉 남부권 공원 및 휴양림 조성 • 울산 정원지원센터 건립
	디지털관광 기반 구축	• 보문관광단지 정비 • 애니메이션 테마파크 조성 • 포은 정몽주 테마랜드 조성 • 낭만 워터폴리 전망대 & 낭만광장 조성

제3절 산업 고도화 및 신산업 육성

1. 발전구상

1) 발전방향

▌신산업 기반 구축

○ 3D프린팅, 자율주행차, 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 양성자 연계 연구, 생체모사융합연구 등을 위한 R&D 기반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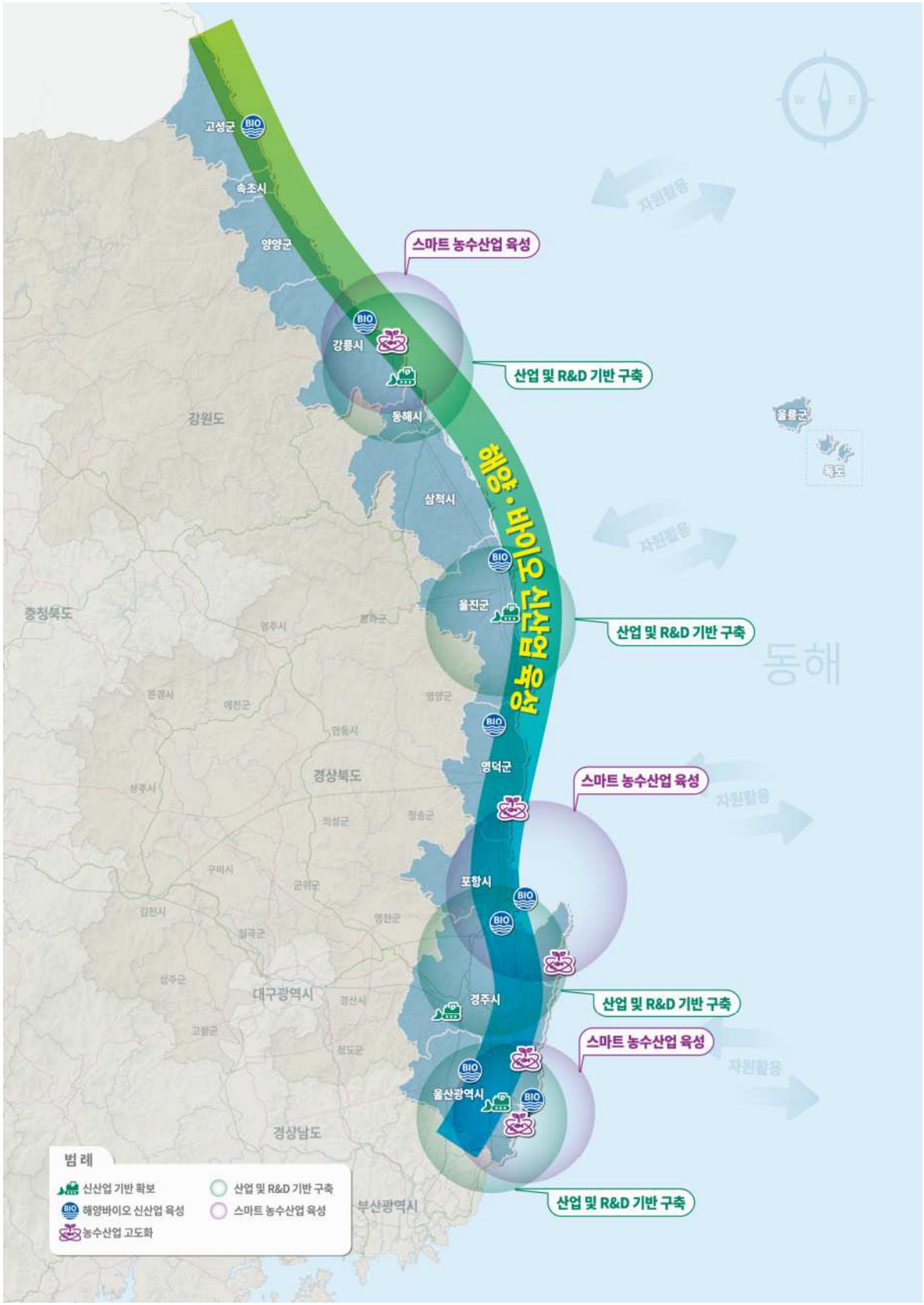
▌해양·바이오 신산업 육성

○ 자율운항선박 실증, 해양디지털 재난·안전 감측망 구축, 해양기술실해역 시험평가시스템 구축, 해양레포츠 과학관 건축 등으로 조선해양산업 고도화

○ 게놈, 해양생물 자원, 신약개발, 해양심층수 등의 개발사업을 통한 바이오 신산업 육성

▌농수산업 고도화

○ 농수산식품 가공, 스마트팜, 스마트양식 등의 개발을 통한 스마트 농수산업 육성



▲ 산업 고도화 및 신산업 육성 전략 구상도

2) 협력프로젝트

▮ 신산업 기반 구축

○ 산업 및 R&D 기반 구축 프로젝트

- 3D프린팅 융합기술센터, 자율주행 스마트도로 인프라 구축 등으로 미래 신산업 육성 기반을 구축하고, 양성자 가속기 R&BD단지 개발, 환동해 생체모사융합연구센터 조성 등으로 지역 R&D 역량 강화
- 희토류 소재산업 클러스터 조성으로 소재산업 육성 기반 확보



▲ 발전방향(신산업 기반 구축) 구상도

▌해양·바이오 신산업 육성

○ 조선해양산업 고도화 프로젝트

-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 구축 사업으로 스마트쉽 육성 기반을 확보
- 해양디지털 I 4.0 재난·안전 감측망 구축, 해양기술실해역 시험평가시스템 구축, 해양바이오·레포츠과학관 조성 등으로 해양산업 고도화 추진

○ 바이오 신산업 육성 프로젝트

- 게놈서비스산업 규제자유특구 조성, 국립 해양생물 종복원센터 유치, 가속기 기반 신약개발 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바이오 신산업 기반 확보
- 해양심층수 융복합 산업클러스터 조성. 해양심층수산업지원센터 장비 구축 등으로 해양바이오 신산업 기반 확보



▲ 발전방향(해양·바이오 신산업 육성) 구상도

▌농수산업 고도화

○ 스마트 농수산업 육성 프로젝트

- 농수산식품 가공센터 건립, 스마트팜 조성 등으로 6차산업 육성 기반을 조성하고,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수산식품 수출가공 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수산업의 스마트화 추진



▲ 발전방향(농수산업 고도화) 구상도

2. 협력프로젝트별 개발사업

▼ 발전방향, 협력프로젝트 및 개발사업

발전방향	협력프로젝트	개발사업
신산업 기반 확보	산업 및 R&D 기반 구축	▪ 3D프린팅 융합기술센터 구축 ▪ 자율주행 스마트도로 인프라 구축 ▪ 신경주 역세권 및 양성자 가속기 R&BD단지 개발 ▪ 환동해 생체모사융합연구센터 조성 ▪ 희토류 소재산업 클러스터 조성
해양 · 바이오 신산업 육성	조선 · 해양산업 고도화	▪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 구축사업 ▪ 해양기술실해역 시험평가시스템 구축 ▪ 해양디지털 l 4.0 재난·안전 감측망 구축 ▪ 환동해 해양바이오 · 레포츠과학관 조성
	바이오 신산업 육성	▪ 게놈규제자유특구 ▪ 국립해양생물종복원센터 건립 ▪ 가속기 기반 신약개발 클러스터 조성 ▪ 해양심층수 융복합 산업클러스터 조성 ▪ 해양심층수산업지원센터 장비 구축
농수산업 고도화	스마트 농수산업 육성	▪ 울산북구 농식품 가공센터 건립 ▪ 울주형 스마트팜 조성 ▪ 강릉 스마트팜 조성 ▪ 포항형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 경북 수산식품 수출가공 클러스터 조성

제4절 환동해권 소통 연계 인프라 확충

1. 발전구상

1) 발전방향

▌환동해 교류 및 협력 기반 구축

○ 환동해권에서 중추적 역할 수행을 위한 교류 및 협력 기반 마련

○ 해양교역을 위한 항만 기능 특화 및 지원기능 강화로 환동해권 중심역할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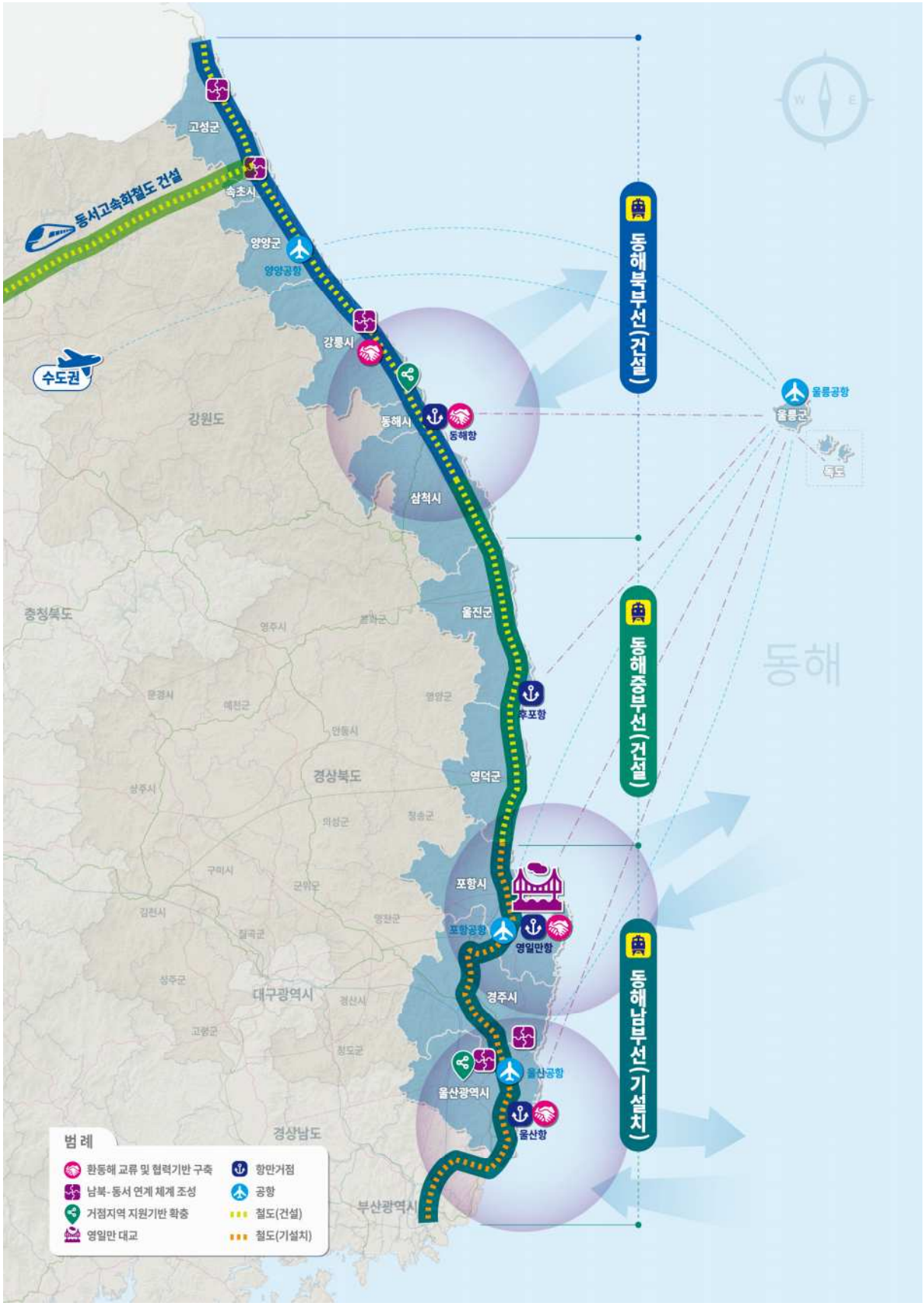
▌동해안권 남북-동서 연계체계 조성

○ 동해안권내의 남북연결체계 마련을 위해 철도망을 구축하여 원활한 소통체계 마련

○ 내륙과의 연계를 위해 동서간 철도망을 구축하고 동해안권 내의 연계를위한 도로망 강화

▌거점지역 지원기반 확충

○ 영토 수호 및 관리를 위한 울릉도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지역 거점 접근성 강화를 위한 교통망 확충



▲ 환동해권 소통 연계 인프라 확충 전략 구상도

2) 협력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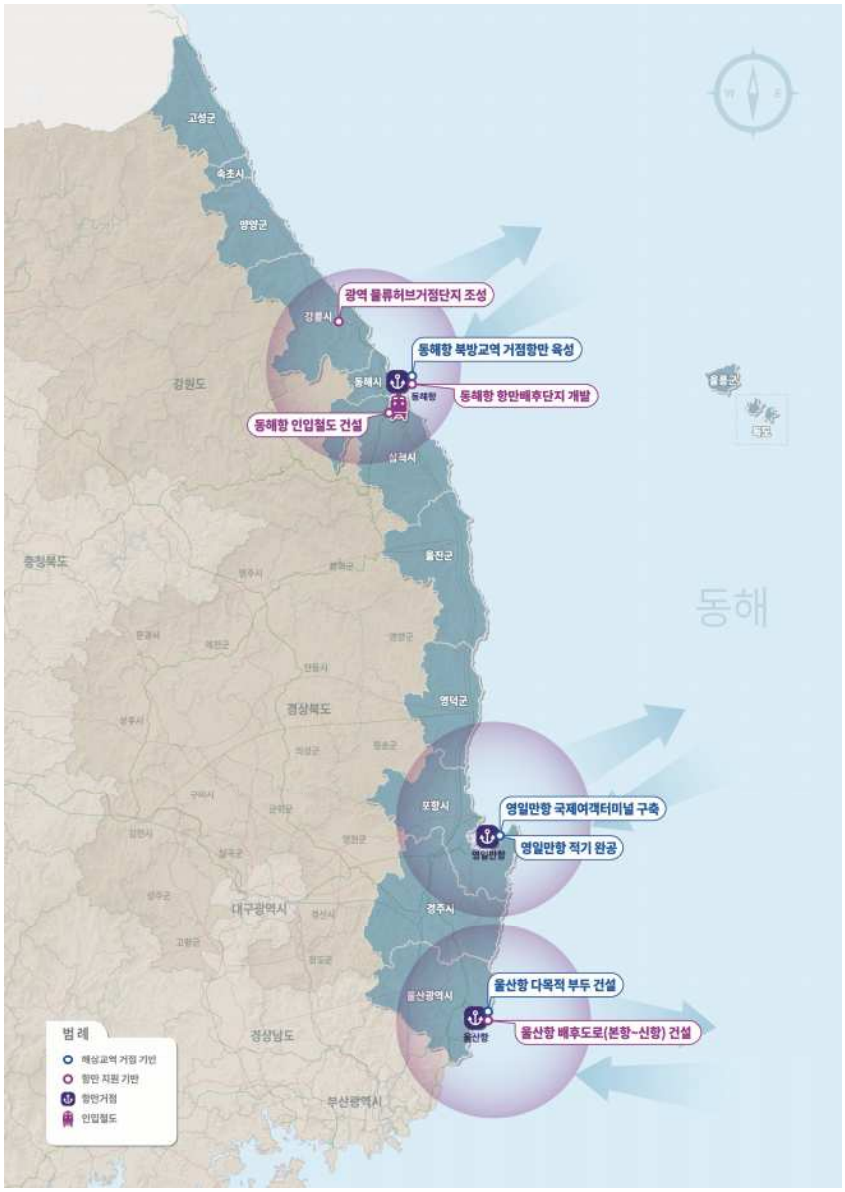
▮ 환동해 교류 및 협력 기반 구축

○ 해상교역 거점 조성 프로젝트

- 울산항, 동해신항, 영일만항 개발을 통해 동해안권 해상교역 기반을 구축하고 영일만항 국제여객터미널 구축을 통해 물적·인적 교류 거점 마련

○ 항만 지원기능 강화 프로젝트

- 항만 기능 강화를 위해 배후단지, 배후도로, 항만배후단지, 물류거점단지 구축으로 원활한 항만기능 유지



▲ 발전방향(환동해 교류 및 협력 기반 구축) 구상도

▮ 동해안권 남북-동서 연계체계 조성

○ 환동해권 연계 철도망 구축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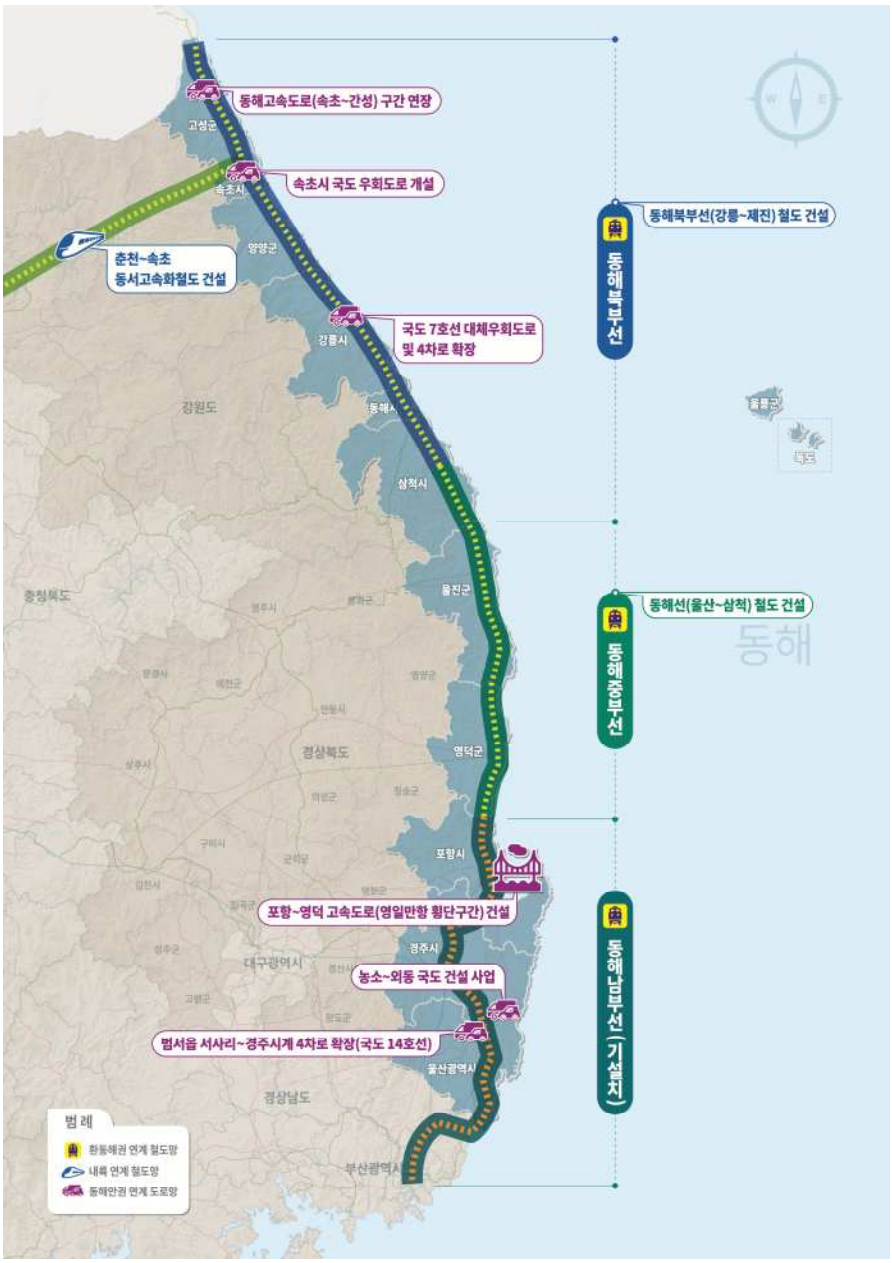
- 동해안권의 연계 및 향후 환동해권으로 육상 교통망 연결을 위한 동해선 철도 건설

○ 내륙 연계 철도망 구축 프로젝트

- 동해안권과 내륙 소통망 구축을 위한 철도망 건설

○ 동해안권 연계 도로망 강화 프로젝트

- 동해안권 간 교류·소통을 위한 고속도로 및 국도 건설·확장으로 교통량 확보



▲ 발전방향(동해안권 남북-동서 연계체계 조성) 구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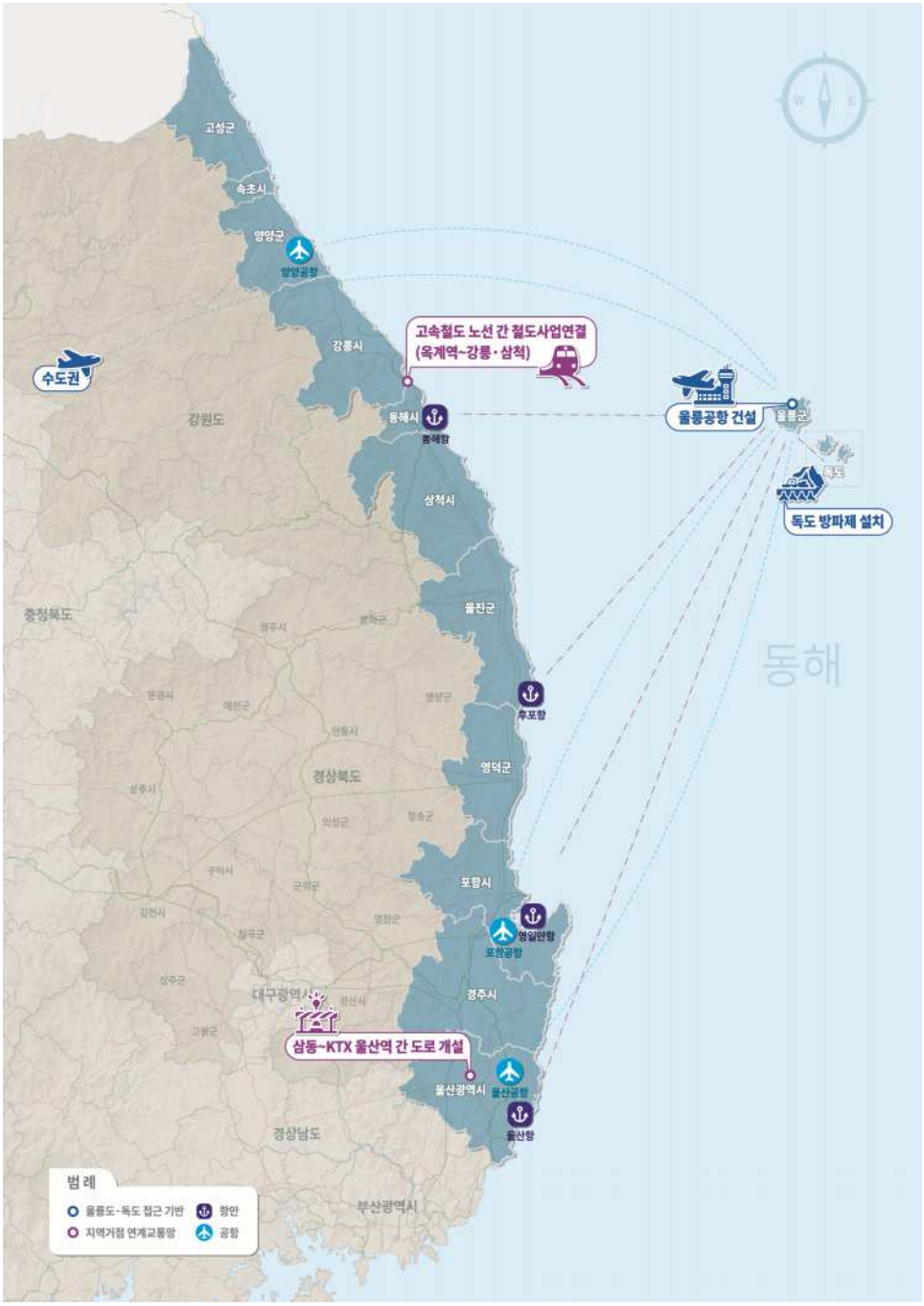
▮ 거점지역 지원기반 확충

○ 울릉도·독도 접근성 개선 프로젝트

-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 및 수호를 위해 울릉도·독도 접근성 개선을 위한 울릉공항 및 독도 방파제 건설

○ 지역거점 연계교통망 확충 프로젝트

- 동해안권 주요 교통거점의 연계를 위해 도로망을 구축하고 철도연결사업 추진



▲ 발전방향(거점지역 지원기반 확충) 구상도

2. 협력프로젝트별 개발사업

▼ 발전방향, 협력프로젝트 및 개발사업

발전방향	협력프로젝트	개발사업
환동해 교류 및 협력기반 구축	해상교역 거점 조성	▪ 영일만항 적기 완공 ▪ 북방교역 거점항만 동해신항 육성 ▪ 영일만항 국제여객터미널 구축 ▪ 울산항 다목적 부두 건설
	항만 지원기능 강화	▪ 동해항 인입철도 건설 ▪ 울산항 배후도로(본항~신항) 건설 ▪ 동해항 항만배후단지 개발 ▪ 광역 물류허브거점단지 조성
동해안권 남북~동서 연계체계 조성	환동해권 연계 철도망 구축	▪ 동해선(울산~삼척) 철도 건설 ▪ 동해북부선(삼척~제진) 철도 건설
	내륙 연계 철도망 구축	▪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건설
	동해안권 연계 도로망 강화	▪ 포항~영덕 고속도로(영일만항횡단구간) 건설 ▪ 동해고속도로(속초~간성) 구간 연장 ▪ 범서읍 서사리~경주시계 4차로 확장(국도 14호선) ▪ 속초시 국도 우회도로 건설 ▪ 국도 7호선(홍제~상사동~옥계) 대체우회도로 및 4차로 확장 ▪ 농소~외동 국도 건설 사업
거점지역 지원기반 확충	울릉도·독도 접근성 개선	▪ 울릉공항 건설 ▪ 독도방파제 설치
	지역거점 연계교통망 확충	▪ 삼동~KTX울산역 간 도로 개설 ▪ 옥계역~강릉·삼척 고속철도 노선 간 철도 연결

제5장

집행관리계획

제1절 투자 및 재원조달계획

제2절 계획의 집행 및 관리

제5장 집행관리계획

제1절 투자 및 재원조달계획

1. 투자계획 및 경제적 파급효과

1) 투자계획

▌104개 개발사업, 총사업비 24조6,729억원

○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수는 104개이며, 총사업비는 24조 6,729억원임

- 국비 48.6%, 지방비 12.0%, 민자 39.4%로 구성
- 본 변경계획 인프라 부문 사업 중 기존사업의 기투자된 사업비와 신규사업의 기반시설사업비(도로, 철도, 항만, 공항) 사업비는 미반영

○ 전략별로는 에너지산업 성장 동력화 전략 34.1%, 글로벌 신관광허브 구축 전략 23.0%, 산업 고도화 및 신산업 육성 전략 9.5%, 환동해 소통 인프라 구축 전략 33.4%로 구성

▼ 총 사업비

(단위 : 억 원)

전 략	사업수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민자
합 계	**104**	**246,729.4**	**119,827.9**	**29,719.0**	**97,182.5**
에너지산업의 성장 동력화	10	84,096.4	18,457.0	6,762.9	58,876.5
글로벌 신관광허브 구축	54	56,619.8	25,502.5	12,383.3	18,734.0
산업 고도화 및 신산업 육성	19	23,501.7	9,249.4	3,864.3	10,388.0
환동해 소통 연계 인프라 구축	21	82,511.5	66,619.0	6,708.5	9,184.0

주 : 인프라 부문 사업 중 기존사업의 기투자된 사업비와 신규사업의 기반시설사업비(도로, 철도, 항만, 공항) 사업비는 미반영

▮ 지역별 사업비는 울산 30.0%, 강원 32.5%, 경북 33.2%, 공동 4.3%

○ 지역별 사업비에서 울산광역시는 민자(76.2%), 강원도는 국비(65.7), 경상북도는 국비(55.3%)가 가장 비중이 높음

- 공동사업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구성됨

○ 전략별 사업비에서 '에너지산업의 성장동력화' 전략은 울산광역시(67.2%), '글로벌 신관광허브구축' 전략은 강원도(38.4%), 산업 고도화 및 신산업 육성' 전략은 경상북도(61.3%), '환동해 소통 연계 인프라 구축' 전략은 강원도(58.3%)가 가장 비중이 높음

▼ 지역 · 전략별 사업비

(단위 : 억 원)

구 분	재 원	울산광역시	강원도	경상북도	공 동
합 계	계	73,828.7	80,182.4	82,020.3	10,698.0
	국 비	11,119.4	52,645.9	45,364.6	10,698.0
	지 방 비	6,461.3	12,324.0	10,933.7	-
	민 자	56,248.0	15,212.5	25,722.0	-
에너지산업의 성장 동력화	계	56,493.0	1,913.4	25,690.0	
	국 비	9,510.0	38.0	8,909.0	-
	지 방 비	3,408.0	33.9	3,321.0	-
	민 자	43,575.0	1,841.5	13,460.0	-
글로벌 신관광허브 구축	계	15,467.0	22,541.5	18,611.3	-
	국 비	846.0	12,631.9	12,024.6	-
	지 방 비	2,033.0	4,523.6	5,826.7	-
	민 자	12,588.0	5,386.0	760.0	-
산업 고도화 및 신산업 육성	계	1,868.7	7,220.0	14,413.0	-
	국 비	763.4	4,665.0	3,821.0	-
	지 방 비	1,020.3	1,058.0	1,786.0	-
	민 자	85.0	1,497.0	8,806.0	-
환동해 소통 연계 인프라 구축	계	-	48,507.5	23,306.0	10,698.0
	국 비	-	35,311.0	20,610.0	10,698.0
	지 방 비	-	6,708.5	-	-
	민 자	-	6,488.0	2,696.0	-

주 : 인프라 부문 사업 중 기존사업의 기투자된 사업비와 신규사업의 기반시설사업비(도로, 철도, 항만, 공항) 사업비는 미반영

2) 경제적 파급효과

(1) 분석방법

○ 2020년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5년 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를 분석

○ 계획에서 제시된 사업이 모두 추진된다는 전제 아래 각 지역에서 실시되는 사업에 대해 지역 내 효과와 지역 외(3개 시·도 외) 효과 추정

- 공동개발사업(동해선 철도 건설) 사업비 1조698억 원은 3개 시·도에 걸쳐 진행하는 사업으로 이들 각 지역별 사업비를 분배하여 지역별 파급효과를 산출
- 경제적 파급효과는 일정한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향후 지속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총 사업비를 기준으로 추정

○ 세부사업 내용 검토 후 사업분류표 대분류(33개 코드)를 재분류하여 분석

- 2015년 지역 간 산업연관표 기준표를 기준으로 추진전략별 시·도별 파급효과 분석

(2) 분석결과

▮ 전략별 파급효과(지역 내)

○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 개발사업 추진에 24조6,729억 원 투입

- '에너지산업의 성장 동력화' 추진전략에 84,096억 원 투입
- '글로벌 신관광허브 구축' 추진전략에 56,620억 원 투입
- '산업 고도화 및 신산업 육성' 추진전략에 23,502억 원 투입
- '환동해권 소통 연계 인프라 구축' 추진전략에 82,511억 원 투입

○ 4대 추진전략에 따른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생산유발 30조8,711억 원, 부가가치유발 13조4,277억 원, 취업유발 204,748명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 '에너지산업의 성장 동력화' 추진전략은 생산유발 10조5,407억 원, 부가가치유발 4조5,420억 원, 취업유발 69,891명 등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 '글로벌 신관광허브 구축' 추진전략은 생산유발 6조9,739억 원, 부가가치유발 3조410억 원, 취업유발 46,375명 등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 '산업 고도화 및 신산업 육성' 추진전략은 생산유발 3조282억 원, 부가가치유발 1조

3,111억 원, 취업유발 19,763명 등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 '환동해권 소통 연계 인프라 구축' 추진전략은 생산유발 10조3,283억 원, 부가가치유발 4조5,336억 원, 취업유발 68,719명 등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 '에너지산업의 성장동력화', '환동해권 소통 연계 인프라 구축', '글로벌 신관광허브 구축', '산업 고도화 및 신산업 육성' 순으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

▼ 전략별 경제적 파급효과

(단위 : 억원, 명)

전 략	생 산	부가가치	취 업
합 계	308,711	134,277	204,748
에너지산업의 성장동력화	105,407	45,420	69,891
글로벌 신관광허브 구축	69,739	30,410	46,375
산업 고도화 및 신산업 육성	30,282	13,111	19,763
환동해권 소통 연계 인프라 구축	103,283	45,336	68,719

▌지역별 파급효과

○ 동해안권 3개 시·도별 파급효과 크기는 경상북도, 강원도, 울산광역시 순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

- 울산광역시는 생산유발 9조1,744억 원, 부가가치유발 3조9,884억 원, 취업유발 61,815명 등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 강원도는 생산유발 9조8,508억 원, 부가가치유발 4조4,317억 원, 취업유발 67,268명 등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 경상북도는 생산유발 11조8,459억 원, 부가가치유발 5조76억 원, 취업유발 75,665명 등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 지역 내 경제적 파급효과

(단위 : 억 원, 명)

전 략	생 산	부가가치	취 업
합 계	308,711	134,277	204,748
울산광역시	91,744	39,884	61,815
강 원 도	98,508	44,317	67,268
경상북도	118,459	50,076	75,665

▌전략별 파급효과(지역 외)

○ 계획 추진에 따른 지역 외(울산광역시, 강원도, 경상북도 외 지역) 파급효과는 생산유발 17조2,768억 원, 부가가치유발 6조9,386억 원, 취업유발 91,811명 등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 '에너지산업의 성장동력화', '환동해권 소통 연계 인프라 구축', '글로벌 신관광허브 구축', '산업 고도화 및 신산업 육성' 전략 순으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

▼ 전략별 지역외 경제적 파급효과

(단위 : 억원, 명)

전 략	생 산	부가가치	취 업
합 계	172,769	69,386	91,811
에너지산업의 성장 동력화	59,827	24,329	32,579
글로벌 신관광허브 구축	39,253	15,713	20,697
산업 고도화 및 신산업 육성	16,089	6,506	8,742
환동해권 소통 연계 인프라 구축	57,600	22,838	29,793



▲ 동해안권 변경 계획의 경제적 파급효과

2. 재원조달방안

○ 개발사업의 재원조달은 크게 공공부분과 민간부문으로 구분되며, 개별 사업 성격에 따라, 공공재원의 투자 비율을 조정

○ 공공재원은 중앙정부, 자치단체 등으로 구성

- 중앙정부의 재원조달은 국고보조금/지방교부세, 정부투자기관의 직접투자, 각종 기금에 의한 지원 등으로 이루어짐
- 자치단체의 재원조달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직영사업 활성화, 자체 기금조성, 각종 기금과 연금 활용 등으로 이루어짐

○ 민간부문은 국내외 민간기업과 지역주민으로 분류

- 민간기업은 직접투자와 간접 자금투자로 구분
- 지역주민에 의한 조달은 지역내 주민, 주민단체의 현물출자, 공동출자, 현금·현물 기부 등으로 이루어짐

▼ 재원조달 부문 및 조달 방식

구 분		조 달 부 문	조 달 방 식	비 고
공공	중앙정부	▪ 국고보조금/지방교부세 ▪ 정부투자기관의 직접투자 ▪ 각종 기금에 의한 지원	▪ 관련 정부 투자기관 ▪ 관광진흥 개발기금	
	자치단체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직영사업 활성화 ▪ 자체 기금조성 ▪ 각종 기금과 연금 활용	▪ 관례적 일반재정 투자 ▪ 토지공개념 적용 ▪ 지방채 발행 ▪ 공영개발사업단 운영 ▪ 국민투자기금 융자	
민간	기업	▪ 직접투자 ▪ 간접 자금투자	▪ 개발사업 직접투자 ▪ 금융기관, 연기금 등의 간접투자 ▪ PF, 채권 등	
	지역주민	▪ 지역내 주민, 주민단체	▪ 현물출자 ▪ 공동출자 ▪ 현금·현물 기부 등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1)]

○ (협약 대상) 기본적으로 균특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으로서 국가와 지자체 간 또는 지자체 상호 간에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 (재원 조달) 상호 일정비율을 분담하지만 지자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차등분담

-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협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우선 지원하고 예산 편성에 이를 즉시 반영하여야 함

○ (협약 체결) 지자체 장은 협약안을 마련하여 시·도 혁신협의회 심의를 거쳐 균형위에 제출

- 균형위는 관계부처 의견조회를 거쳐 검토의견을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주관부처에 체결안 작성을 요청
- 주관부처는 지자체와 협의하여 체결안을 마련하고, 균형위 심의·의결을 거쳐 체결안이 확정되면 공동으로 협약을 체결

○ (변경 및 해약) 협약사업을 추진하면서 총사업비 또는 사업면적이 30% 이상 변경되거나, 협약기간이 1년 이상 변경되는 등 중대한 변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균형위 심의·의결을 거쳐 변경 가능

- 협약체결 당사자 간 합의하는 경우 균형위 심의·의결을 거쳐 해약 가능

○ (협약 지원) 균형위와 국토부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장이 요청하는 경우 합동지원팀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국토부는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를 활용하여 지역발전투자협약 추진과정 모니터링 및 사업컨설팅, 성과평가, 제도개선 연구 등을 지원할 수 있음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 발굴

- 대상사업 : 민간투자법상 대상시설(「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사업타당성 존재, 사용료 부과 및 수익성 여부
- 추진 방향 : 지역공약 사업의 경우 사업내용 검토 및 부처협의 등을 거쳐 민자 추진 가능성이 높은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 등, 나머지 사업의 경우 주무관청 및 민간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민자 추진 가능성이 높은 사업은 타당성 분석 등 우선 추진

1) 국토부, '지역발전투자협약 운영지침' 제정·고시(2019.11.11.)

○ 사업 성격에 따라 적절할 민간투자방식을 선정하여 추진
- 민간투자법상 민간투자방식은 크게 수익형(BTO, BOT, BOO)과 임대형(BTL) 방식으로 구분

○ 민간의 적극적 투자 및 참여가 요구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은 공공주도로 초기 사업을 추진 후 중장기적으로 민간 참여를 독려

○ 민간자본 투자 유치를 위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세제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 필요

○ 해안권 발전계획의 개발사업에 대한 제도적 개선
- 조세감면 :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등의 조세감면 조항 신설
- 부담금 감면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등의 부담금 감면 조항 신설

▼ 해안권 특별법과 지역개발 지원법의 특례조항 비교

구분	해안내륙발전법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조세감면	▪ 사업시행자 :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 등 법률에 따라 법인세 · 소득세 · 관세 · 취득세 · 등록세 또는 재산세 등의 조세 감면 가능 ▪ 입주기업 :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 등 법률에 따라 법인세·소득세·관세·취득세·등록세 또는 재산세 등의 조세 감면 가능	▪ 시행자 및 입주기업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관세법」및 「농어촌특별세법」등 법률에 따라 법인세 · 소득세 · 관세 · 종합부동산세 · 부가가치세 · 취득세 · 재산세 등의 조세 감면 가능
부담금 감면	▪ 사업시행자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농지법」·「초지법」·「공유수면관리법」 및 「하천법」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공유수면 및 하천 점·사용료를 감면 가능	▪ 사업시행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초지법」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하천법」에 따른 하천 점용료 및 하천수 사용료 감면 가능

제2절 계획의 집행 및 관리

1. 계획 추진체계

1) 협력 거버넌스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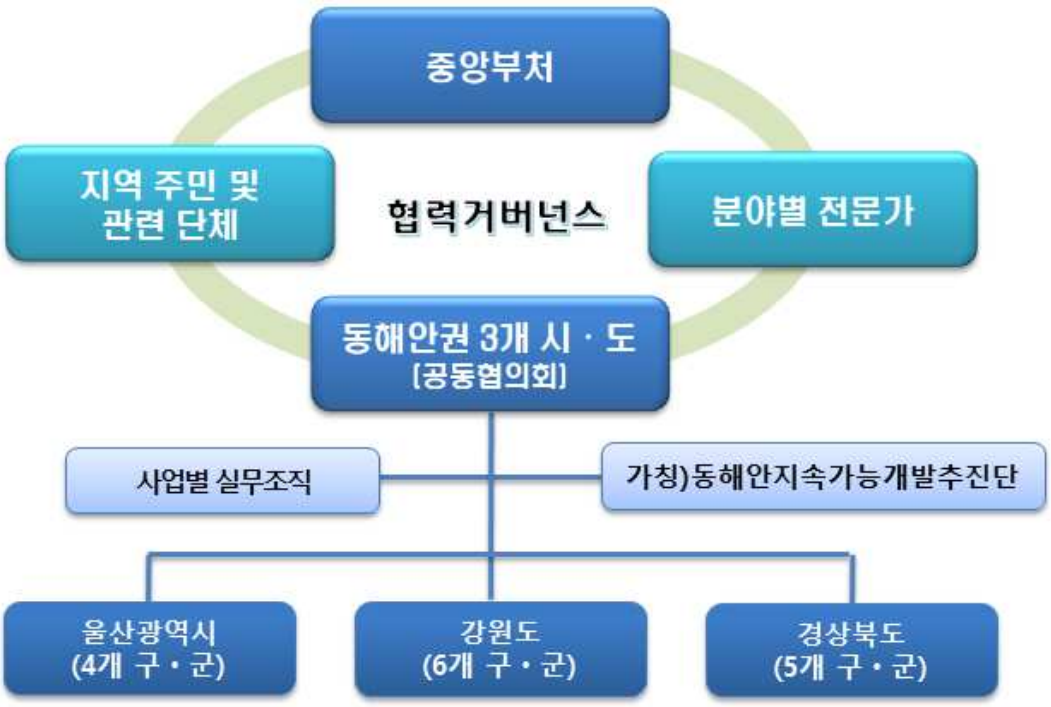
▮ 정부부처 · 지자체 · 주민 · 전문가 참여 거버넌스 구축

○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정부부처는 해안내륙발전법 등 관련 법에 따른 개발사업 진행 및 지원대책을 수립

○ 관련 광역지자체인 동해안권 3개 시·도는 15개 기초지자체와 개발사업에 대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예산과 인력을 배정

○ 지역 주민은 동해안권 개발사업에 대한 이해와 참여, 성공적 추진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

○ 분야별 전문가는 동해안권 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여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제고



▲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 추진 거버넌스

2) 3개 시·도 협력체계

▮ 동해안권 발전공동협의회의 정례화

○ 동해안권에서는 2004년부터 '동해안권 시·도지사 협의회'를 구성·운영

- 창립당시 동해권 공동발전 연구용역 추진, 동해안 사회간접자본인프라 구축 공동대응, 동해권 문화·관광산업 촉진 공동 추진, 동해안 연안관리 및 해양자원보호 공동대처, 동북아 석유·천연가스공급망 구축 준비,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과제 등 공동대응 협력과제 선정

○ 2008년에는 공동 의사결정기구 성격을 지니는 '동해안권 발전 공동 협의회' 구성·운영

○ 동해안권 발전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 위해 '동해안권 발전 공동 협의회'를 정례화

▮ 동해안권 발전포럼 지속 운영

○ 동해안권에서는 3개 시·도와 지역연구원(울산발전연구원, 강원발전연구원, 대구경북연구원)이 함께 '동해안 발전포럼'을 2005년부터 운영



▲ 2019년 제12회 동해안발전포럼

- 동해안 광역권 개발 지원특별법 발의를 위한 동해권 시·도지사·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지역의 관련주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동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것에 합의함에 따라 발족

○ 2019년 기준 12회차를 운영 중이며, 포럼을 통해 동해안 발전을 위한 3개 시·도의 공동협력방안을 논의

○ 향후 전문가, 주민, 시민단체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

▮ 가칭)동해안지속가능개발추진단 설립·운영

○ 지속가능한 개발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동해안권 지자체가 공동출자하여 운영하는 '가칭)동해안지속가능개발추진단'을 설립·운영

2) 추진전략별 협력체계

▮ 에너지 부문

○ 동해안 수소경제벨트 조성을 위해 '가칭)동해안수소경제벨트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국내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지정된 전담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 동해안 지역 수소 생산, 유통, 활용, 산업화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체계로서 협의체 구성
-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인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수소유통전담기관인 한국가스공사, 수소안전전담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와의 협력체계 구축

○ 산업부 공모사업으로 지정된 경북 영덕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중심으로 동해안 육성 및 해상풍력 사업 및 산업화를 지원

- 경북 영덕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는 풍력 다운스트림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풍력 전문인력 양성 기술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계획
- 동해안 풍력사업에 필요한 풍력 운영·정비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공동으로 추진

○ 울산과 경북 경주시에 설치할 원전해체산업 육성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협력체제 구축

- 정부는 산업 육성 및 원전 중소기업 지원의 핵심 인프라로서 원전해체연구소를 부산·울산(경수로 분야), 경주(중수로 분야)에 '21년 하반기 설립을 목표로 추진
- 울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원전해체기술에 대해 울산·경북 관련 인력을 공동 교육할 수 있는 협약 체결
- 울산·경북 주요 대학에 풍력산업 원전해체분야 대학원 과정, 특화 과정 등을 개설하고 두 지역 관련 인력이 공동으로 수강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 구축
- 울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참여하는 기업과 협력하여 현장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교육 이수 후 취업 연계

▮ 관광 부문

○ 동해안권을 잇는 블루로드 및 해양헬스케어벨트 구축을 위해 '가칭)동해안해양헬스케어협의회'를 구성·운영

- 광역자치단체 협력을 위한 협의체, 해당지역 기초자치단체, 해양바이오 및 관광사업자에 의한 민간기업, 주민협의체 등으로 구성

- 헬스케어 프로젝트 추진 성격에 비추어 광역시·도 권역을 넘어서는 초광역협력 필요

○ 해양레포츠 및 로하스 휴양관광벨트 프로젝트를 위해 '가칭)동해안해양웰니스 관광협의회' 구성·운영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의 NGO, 지역대학 및 연구소, 전문가 집단과 언론계, 주민협의체 등으로 구성

- 민간투자가 포함된 사업에 대한 거버넌스는 순수 공공투자로 진행되는 거버넌스 구성 요소에 협동조합이 포함된 지역주민 협의체, 관련기업과 관광사업체로 구성

○ 융복합관광 활성화를 위한 '가칭)동해안융복합관광협의회' 구성·운영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의 NGO, 지역대학 및 연구소, 전문가 집단과 언론계, 주민협의체 등으로 구성

▌산업 부문

○ 바이오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가칭)바이오빅데이터센터' 구축·운영

- 동해안 게놈, 해양생물, 신약 및 의료, 해양심층수 관련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전문센터를 동해안 지역 주요 대학별로 설치

- 동해안 지역 주요 대학에 설치된 센터 간 협의회를 구성하여 정기적 회의체를 운영하고 관련 정보를 교환, 빅데이터 관련 기업 참여를 유도

○ '가칭)동해안스마트농수산협의회' 구성·운영

- 동해안 지역 스마트팜, 스마트양식, 농수산식품가공센터 등 개발사업 협력을 위해 공무원, 전문가, 농수산인 등으로 구성

- 동해안 지역별 사업 현황, 기술 교류, 판매·유통 등에 관한 정보 교류, 사업 추진 관련 문제점 논의 등

▌인프라 부문

○ 동해안권 주요 항만 활성화를 위한 '가칭)동해안권항만공동세일즈협의체' 구성·운영

- 환동해권 주요 항만 역할을 수행하는 동해항, 포항항, 울산항 등은 상호 경쟁관계에 있으며 시·도 각각 항만 활성화를 위한 포트 세일즈 중

- 동해안권 항만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쟁관계가 아닌 상호 보완적 관계로 항만 특화 방안을 활용한 공동 항만 마케팅 및 세일즈로 환동해권 물류 시장에 대응할 필요

- (가칭)동해안권항만공동세일즈협의체를 구성하여 각 항만별 특성을 고려한 물류 및 크루즈 항로 공동 유치 노력

2. 성공적 사업 추진

1) 우선순위 설정

▌핵심사업

○ 본 계획에서 선정한 핵심사업은 사업계획이 명확하고 사업 타당성이 어느 정도 확보된 사업으로 신속 집행 가능

○ 3개 시·도에서 제안한 21개 핵심사업을 선정평가위원회 평가를 통해 우선순위를 선정

▌지역발전 및 파급효과가 큰 사업

○ 일자리 창출, 경제적 효과가 높은 사업으로 지역발전과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우선 추진하여 동해안권 개발사업의 효과성을 제고

▌투자유치 가능성이 높은 사업

○ 민간자본이 참여가 가능하여 투자 유치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우선 추진하여 국가 및 지방 재정부담을 감소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

2) 시행 방안

▌해안내륙발전법에 근거한 개발사업

○ 본법 제7조(개발구역의 지정 등) 절차에 따라 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추진

○ 개발구역 규모는 해안내륙발전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규모 3만㎡ 이상, 도시지역외 지역 또는 공공주택 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30만㎡ 이상

▌타 법에 의해 근거한 개발사업

○ 해당 법령에서 정한 단지, 지구, 지역 등을 지정한 후 시행

○ 본 계획에서 제시된 개발사업은 관광, 산업, 인프라 등 관련 다양한 법에 근거하여 추진

▌투자선도지구 지정

○ 투자선도지구는 지역개발사업구역 그 자체를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거나 주변 지역의 민간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사업여건의 조성, 대규모 개발사업의 민간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지정

-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특별히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투자선도지구 사업모델을 선정할 수 있으며, 사업모델에 해당되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을 우선적으로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음[2)]

○ 투자선도지구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위치에 따라서 발전촉진형과 거점육성형으로 구분

- 발전촉진형 :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에 지정되는 투자선도지구
- 거점육성형 : 거점지역에 지정되는 투자선도지구

○ 투자선도지구 지정 요건

- 광역교통망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거나 확보될 수 있는 지역
- 지역특화산업, 문화·관광 등의 분야에서 성장잠재력이 양호한 지역
- 투자 또는 고용창출 예상규모가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
  - 발전촉진형 : 투자금액이 500억 원 이상이거나 신규 고용창출이 100인 이상으로 예상되는 지역개발사업구역
  - 거점육성형 : 투자금액이 1,000억 원 이상이거나 신규 고용창출이 300인 이상으로 예상되는 지역개발사업구역
- 성장거점으로서의 육성 또는 민간투자의 활성화가 쉬운 지역
  - 지역경제의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고, 인근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 지역생활권의 거점으로 개발이 필요한 지역

3) 동해안권 개발사업 평가제도 도입

▌주요 내용

○ 동해안권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시행과 성과 제고를 위해 정기적인 사업성과

2) 국토교통부, 2018.10,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분석·평가시스템 도입

○ 평가대상, 평가방법 및 절차, 결과 활용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마련

○ 동해안권 개발사업의 집행에 관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사업진척정도를 파악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유도

- 국토교통부의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참조
- 재정조달 및 집행실적 평가의 경우 예산집행률 평가
- 사업관리 역량 평가의 경우 추진조직 및 관리 역량, 갈등대처 역량 등을 평가

▼ 단위사업 집행결과 평가기준

평가분야	사업시행자	평가항목	평가지표
재정조달 및 집행실적	지자체, 민간 등	예산집행율	예산현액 대비 집행액
사업관리 역량	지자체, 민간 등	추진조직 및 관리 역량	사업추진 전담체계 구축 여부 및 운영 역량
			자체 점검시스템 구축 및 운영 역량
		갈등대처 역량	민원 등 대응, 조치여부
			집행부진 등을 야기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노력 여부

자료 : 국토교통부, 2018.10,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4) 홍보 및 마케팅

▮ 동해안권 통합브랜드 개발

○ 동해안권 비전의 핵심 키워드인 '블루 파워'를 대표 이미지로 하는 통합관광브랜드 개발

○ 통합관광브랜드 개발을 통해 동해안권 이미지를 제고하고 투자 및 관광객 유치 확대에 활용

- 동해안 대표관광지, 특산품(친환경 농수산물, 심층수 등), 관광상품 등에 시범 적용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11.6.1

▲ 동해안 탐방로 '해파랑길 브랜드 아이덴티티(BI) 및 특화 환경 디자인'

▌홍보·마케팅 공동 전담조직 구성 및 전략 수립

○ 동해안권 3개 시·도 공동 홍보·마케팅사업 집행조직 설립 또는 협의체 구성을 통하여 동해안권 브랜드 관리, 지역자원 및 관광상품의 홍보 및 마케팅 등을 전담

○ 지자체 공무원, 마케팅 전문인력 등이 참여하고, 조직체계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공동 노력

○ 동해안권 개발사업 개요 및 추진 현황, 주요 자원, 시·도 간 연계 등에 관한 언론 보도, 홈페이지 제작, 유튜브 등 홍보동영상 제작 등 홍보·마케팅전략 수립

○ 동해안권 개발사업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홍보를 위한 국내외 포럼, 컨퍼런스 등을 추진

▌이벤트맵 및 캘린더 작성을 통한 체계적 홍보

○ 동해안 시·군별 이벤트를 절기, 속성 및 지역에 따라 매트릭스를 작성하여 동해안 이벤트맵과 캘린더 제작

○ 절기·속성·지역에 따른 이벤트를 관광상품과 통합·연계하여 국내외 관광수요자들에게 관광정보 및 실시간 안내서비스 제공

○ 관광 거점 및 관광벨트를 중심으로 한 테마별 마케팅 방안 구상

- 국제관광 거점 조성, 해양 관광벨트 구축, 융·복합관광 육성 등의 테마별 관광 휴양 전략 및 사업을 관광마케팅의 중요 아이템으로 활용

3. 지속가능한 지역개발

1) 지속가능한 지역개발 개념 및 의의

▮ 환경적 지속성, 경제적 효율성, 사회적 형평성 고려

○ 국토개발에 있어서 지속가능성 개념은 환경적 지속성, 경제적 효율성, 사회적 형평성 등을 충족시킬 수 있는 국토의 이용·관리를 의미

- 친환경성, 사회적 형평성, 경제적 효율성의 조화를 통한 정책방향인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원용

○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을 통해 현 세대와 다음 세대가 항구적으로 쾌적하고 풍요로운 자연을 공유

▮ 기후위기에 따른 중요성 확대

○ 코로나19사태, 빈번한 자연재해 등은 지구의 기후가 '변화'하는 수준을 넘어 '위기' 상황에 직면했음을 보여줌

- 화석 연료 채굴과 토지와 물, 해양 파괴, 폐기물 배출로 인한 기후위기는 병원균의 전파와 변형을 촉진하기 때문에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의 확산을 불러옴

- 최근 100년에 한 번 꼴로 일어날 수 있거나 특정한 연도에 발생할 확률이 매우 낮은 극단적인 날씨 빈도가 급격하게 증가

○ 기후위기 상황은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의 필요성을 강화시키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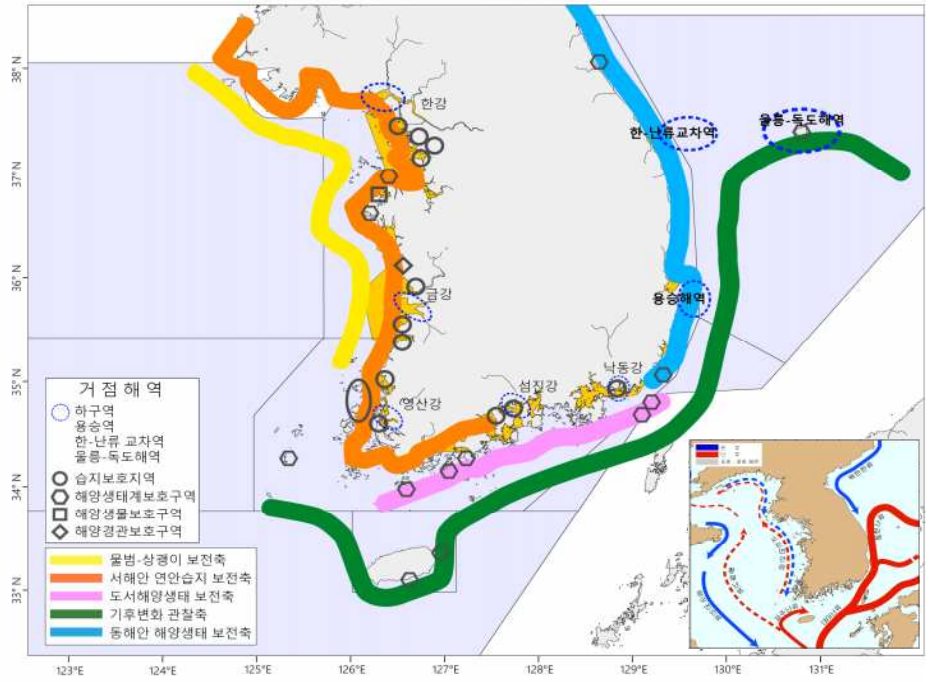
- 2018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가 협의체(IPCC)는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에서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2010년 대비 최소 45% 감축하고,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해야 한다고 제시

- 우리나라 정부도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방법을 제시

○ 동해안지역은 국가환경종합계획에서 '자연경관 보전관리축'으로, 해양수산부의 5대 해양생태축의 하나로 지정되어 그 중요성이 더 큼

- 동해안권에는 한류의 계절적 영향을 받는 '동해안 해양생태 보전축' 설정

- 동해·남해안권에는 우리나라 해역의 아열대화 진행을 관찰·진단하고 대응하기 위한 '기후변화 관찰축' 설정



자료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2020.8.3.

▲ 5대 해양생태축

2) 기본 방향

▮ 개발 및 공급위주에서 관리 및 수요중심 개발

○ 경제성과 함께 환경성과 사회적 형평성 원칙 아래 세대·지역·계층 간 조화 및 개발된 이후의 관리문제 강조

▮ 자연의 수용능력을 감안한 국토 이용과 개발

○ 국토이용 및 개발에 있어서 사후 환경대책보다는 환경에 대한 배려를 우선

▮ 다양한 이해당사자 참여를 통한 협력과 조정 중시

○ 관련 정부부처 간 업무 공유와 협력·조정,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통한 다양한 견해의 집약과정 강조

3) 지표개발을 통한 지속 관리

○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지표는 환경·사회·경제적 지속으로 유도·평가·관리·규제하기 위한 도구 역할

○ 동해안 현황에 맞는 토지이용, 국토환경 보전, 생활환경, 지역개발, 교통 및 자원관리 등 6개 분야 지역개발지표 개발 추진

4. 법·제도적 기반 구축

1) 투자유치 활성화

▮ 투자유치 중점분야 선정 및 홍보

○ 민간자본 참여가 필요한 사업, 단기 및 중기사업, 고용창출 등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투자유치 중점사업으로 선정

○ 분야별 주요 개발사업에 대한 맞춤형 투자유치 전략을 마련하고, 타깃 마케팅 실시

- 잠재적 투자자 설정 → 표적 대상 사전 마케팅 → 개별사업에 대한 IR홍보자료 작성 → 국내외 사업설명회 개최 → 지속적인 사후관리

▮ 투자유치 전담조직 설치

○ 동해안권 발전공동협의회 내 투자유치 전담조직 설치

- 3개 시·도 경제자유구역청 참여(울산경제자유구역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 투자유치 자문을 위한 글로벌 전문투자유치기관 또는 컨설팅기업과 업무제휴

▮ 인센티브 확대

○ 해안내륙발전법에서 제시하는 조세 감면, 부담금 등의 감면을 넘어 동해안을 포함한 해안권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부여

2) 승인 권한 조정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제52조), 관광특구(제70조)의 지정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의해 시·도지사가 지정

○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부여되어 있는 해안권 개발구역과 해양관광진흥지구의 지정에 대한 승인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승인권한 조정

○ 승인권한 조정으로 지역발전 권한 및 자율성을 강화하고 사업 적기 수행 가능

3) 친환경 개발 및 난개발 방지

○ 동해안의 주요 생태경관 훼손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자연환경보전법, 자연공원법, 산지관리 법 등 해당 법령에 따른 구역, 지역 등 지정 여부를 개별 개발사업의 선정 절차에 적용

○ 개발 사업의 선정 절차상 '사업의 친환경성' 평가를 통하여 개발 개발사업의 입지 적합성,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 등을 평가

○ 해안내륙발전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계획의 수립, 관계부처협의, 국토계획평가 및 심의 단계에서 국토의 친환경성 확보 절차 이행

○ 개발사업의 추진 및 개발사업 구역의 지정 단계에서 활용할 '친환경성 확보 가이드라인' 마련

- 도시지역과 예정지구간의 연계성, 예정지구 입지 적정성, 자연환경보전 및 경관을 고려한 녹지·공원체계 형성여부, 환경보전대책 등 내용 포함

○ 개발구역 주변지역에 대해 개발행위 및 건축 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는 등 난개발 방지 강화

4) 거버넌스 관련 3개 시·도 조례 제정

▮ 동해안권 발전공동협의회 등 운영

○ 동해안권 발전공동협의회, 가칭)동해안지속가능개발추진단 등 구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내용을 3개 시·도 조례에 포함

▮ 전략별 개발사업 거버넌스 운영 및 지원

○ 에너지, 관광, 산업, 인프라 부문별 사업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를 3개 시·도 조례에 포함하여 지워 근거를 확보하고 실행력을 제고

- 관광 부문 : 가칭)동해안해양헬스케어협의회, 가칭)동해안해양웰니스관광협의회, 가칭)동해안융복합관광협의회
- 산업 부문 : 가칭)동해안스마트농수산협의회

○ 에너지, 인프라 부문은 민간 협의체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공공에서 지원할 근거를 마련